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Ⅰ) 시리즈 09-10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2009. 9

연 구 기 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책임자: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송경재(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수행한『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Ⅰ)』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Ⅰ)』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9. 30

연 구 기 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참 여 연 구 원 : 송경재(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목 차

요약문 ····· 5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배경 ····· 17
제 2 절 연구목표 ····· 20
제 3 절 연구방법 및 내용 ····· 21

제 2 장 이론적 논의 ····· 24
제 1 절 시민: 계몽적 시민에서 저항 시민으로 ····· 24
제 2 절 사회운동 ····· 32
1. 정체성 형성과 자원동원 ····· 32
2. 구성주의적 접근 ····· 34
제 3 절 디지털 융합과 탈근대 시민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화 ····· 38

제 3 장 한국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 유형과 특징 ····· 44
제 1 절 산업화시대의 대중 사회운동 ····· 44
제 2 절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 ····· 46
제 3 절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 ····· 48

제 4 장 디지털 매개와 융합 사회운동의 비교: 사례의 미시분석 ····· 52
제 1 절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 ····· 52
제 2 절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 ····· 57

제 5 장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미래 전망 ····· 7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76

참고문헌 ····· 80

표 목 차

〈표 2－1〉 시민의 유형 ····· 30
〈표 4－1〉 한국의 연도별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 ····· 60
〈표 4－2〉 아고라 청원방 대통령 탄핵 서명자수 변화 ····· 63
〈표 4－3〉 촛불시위 주도 온라인 생활세계 커뮤니티(인터넷 트래픽 순) ····· 64
〈표 4－4〉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의 촛불시위 중계 시청자 추이 ····· 68

그 림 목 차

〔그림 2－1〕 6월 10일 청와대 웹 사이트 방문자 수 추이 ····· 41
〔그림 3－1〕 시민단체 신뢰도 추이 ····· 50
〔그림 4－1〕 온라인공간의 쇠고기 수입 게시글 분포 ····· 62
〔그림 5－1〕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의 동학 ····· 72

요 약 문

□ 연구 주요 내용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디지털 융합은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양식의 전폭적인 재구성을 촉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고, 수평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소통과 연대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들에 의해 온라인 공간에서 재현되는 현실은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정치의 장(field)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장에서의 소통과 다양한 하위참여문화(sub-culture of participation)는 계급 또는 계층적 정체감을 넘어 다중(multitude) 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존재로 시민의 의미를 재창조한다. 이질적 정체성의 동화 또는 느슨한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다중에 의해 사회운동의 양식 또한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래로부터의 신속한 역의제설정과 여론확산, 리더십 없는 운동, 탈계층・탈정파적 이슈공중(issue public)의 등장, 스워밍(swarming)이나 스네이크 마치(snake march) 같은 무정형의 투쟁 전술, 시민 BJ(Broadcast Jockey)에 의한 시위현장 생중계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대중운동,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사회운동,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보조기제로 활용되는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 등의 과거 양식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운동이 재창조되어 기성 정치집단과 대의제 중심의 민주주의에 강력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 제2절 연구목표

이 연구는 다음의 세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기술 발전의 단계를 기

준으로 시대별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한다. 단계는 산업화－디지털 매개－디지털 융합으로 구분한다. 둘째,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m approach)에 토대해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동학을 분석한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networked individuals)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자원동원 메커니즘이 논의의 초점이다. 셋째,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디지털 융합 환경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상을 조망하고 운동의 동력을 정치과정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 제 3 절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온라인 사회운동 사례들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접근하고 실증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분석 개념을 준거로 사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이 연구의 분석 사례는 크게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과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사회운동의 단계별 양태를 통시적으로 비교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다이내미즘을 정치하게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미래상과 정책적 함의를 논구한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 제 1 절　시민

근래에 들어 시민은 민주주의 모델의 재창조자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예컨대, 바버(Barber)는 과거와 현대의 시민 개념을 대칭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시민은 대중사회의 시민과는 달리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민(public citizen)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를 위하여 공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요청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결사하는 시민으로의 변화는 근대 시민으로부터의 인식론적 전환을 수반한다.

20세기 이후 사회와 문명은 세계화・정보화의 파고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로 다면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① X세대로 대변되는 세대의 변화, ② 생존에서 웰빙(well-being)으로의 변화, ③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의 증가, ④ 블루칼라에서 지식노동자로의 변화, 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⑥ 총합으로서의 사회적인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은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민으로서의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시민에 위상 강화는 사회운동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온라인 기반의(based) 또는 온라인 후원의(supported) 사회운동들에서 시민은 저항 행동주의(protest activism)의 자발적 주체로 등장하였다. 네그리와 하트(Negri and Hardt 2008)는 이러한 행동주의 주체를 다중(Multitude)의 개념으로 재정립한다. 다중은 하나의 통일성이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차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중이나 인민의 개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자와도 다른 의미성을 가진다. 즉 디지털화된 시민 저항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제 2 절 사회운동

1. 정체성 형성과 자원 동원

정체성 지향(collective-oriented) 패러다임과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 패러다임은 사회운동 연구의 가장 경쟁적인 패러다임이다. 양 패러다임이 초점을 맞추는 맥락은 다르다. 전자는 주로 참여자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여 사회운동이 왜(why) 발생하는가를 묻는다. 반면 후자는 주로 자원동원 능력을 중시하여 사회운동이 어떻게(how) 발생하는가를 묻는다. 즉 양 패러다임은 사회운동이 발생・전개되는 주요인으로 각각 운동의 '주체'(정체성)와 '조건'(자원)을 강조한다.

집합적 정체성은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전개시킨다. 첫째, 사회운동에 관련된 행위자들을 범주화한다. 특정의 사회적 가치나 현안에 대하여 개인은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리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정체성의 장(identity field)을 형성하며 아방(we)과 타방(other)을 구분하는 집단의식을 촉진한다. 둘째, 사회운동의 목표와 방식을 정립한다. 사회

운동 참여자들의 집합적 정체성은 인지적 유대에서 정서적 유대로 나아가 정치적 유대로 발전된다. 셋째,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사회운동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정의하고 고무하는 과정이다. 축적된 신뢰는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들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자원동원은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전개시킨다. 첫째, 사회운동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증진시킨다. 합리적 개인에게 성공에 대한 믿음은 참여비용보다 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편익(benefit)이 더욱 크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다. 둘째, 잠재적 참여자들을 운동세력으로 현실화시킨다. 운동자원은 참여자들을 결속시키는 매개체이다. 즉 자원동원 없이 익명의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결속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유무형의 자원이 동원됨으로써 잠재적 참여자들은 실질적 사회운동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사회운동의 전략과 효과를 증대시킨다. 사회운동의 전개는 유효한 전략의 실행에 의거한다. 운동자원이 다양하고 그 규모가 클수록 전략적 유연성이 증대된다. 사회운동의 하부구조로서 시위의 규모와 기간도 증대되고 있다.

2. 구성주의적 접근

근래의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양 패러다임 간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운동이 주체와 조건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경우 분석의 적실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자원동원은 사회운동의 각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e approach)은 양 패러다임의 이론적 성과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주체와 조건이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최근 구성주의적 접근은 특히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을 규명하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제출해왔다.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은 네트워크에 기반하거나(based) 그것의 지원을 받아(supported) 전개되며, 그 범위는 지역과 국가에서 초국적 차원에 이르는 범위를 포괄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다면적인 정치적 잠재력에서 기

인한다.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은 사회운동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운동에서 네트워크는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공간이자 전략적 운동자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양면효과(double impact)로 인해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는 변화를 겪고 있다. 정체성 지향 패러다임에서 볼 때, 네트워크는 합의의 동원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개인들이 공동의 의미틀과 정체성을 구축하며 능동적 행위자로 전환됨으로써 사회운동이 발생한다. 자원동원 패러다임에서 볼 때, 네트워크는 행동의 동원을 촉진하는 도구이다. 즉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운동은 확산된다.

－ 제 3 절 디지털 융합과 탈근대 시민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화

최근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매개의 온라인 사회운동과는 다른 양상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미디어적인 정보제공의 네트워크적인 확산만이 아닌 조직과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4년의 태국 군부쿠데타와 시민들의 저항, 2007년과 2008년의 버마 민주화운동, 중국의 티베트 독립운동,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그리고 2009년 이란 대통령선거의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시위에 이르기까지 웹 2.0 환경의 디지털 융합은 과거 텍스트 위주의 정보전달을 넘어 조직과 동원의 기제로 가능케 한다.

디지털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 무선과 통신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해 사회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기존의 폐쇄적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매개방식에서 웹 2,0의 개방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시민참여 채널은 급증하고 있다.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이트, 트위터 같은 단문형 블로그,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1인 미디어가 등장한다.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집단과 아마추어 집단의 경계가 없어지고 시민의 새로운 방식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 3 장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

－제 1 절 산업화시대의 대중 사회운동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서구와는 다른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해방 후 극대화되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운동세력이 형성되면서 가시화된다. 특히,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광주민주화 운동은 운동지도부와 시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과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과 조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조직화되었으며 사회운동 역시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되었다.

시민의 민주주의적인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운동은 성공해 1990년대 이후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 탄압국면은 사라지고, 시민사회도 점차 제도권내로 진입하고 합법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권위주의 시기의 시민운동은 자유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운동,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 시민사회운동은 주로 시민이 자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는 시민사회를 투쟁적이고 저항의 공간으로 흡인하는 계기가 된다.

－ 제 2 절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운동은 변환기를 맞이한다.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웹 1.0 환경에서의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은 점차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을 증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기 형태이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참여방식이 등장한다. 예컨대, 주장을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 패러디, 항의 메일, 사이트 공격, 리플 달기, 글 나르기, 사이버 폴(cyber poll) 참여, 사이버 촛불시위, 동영상 제작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원인은 정보화라는 새로운 거대 패러다임의 확산이다. 이 패러다임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의 실체들과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사회운동 집단에게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하였다. 둘째 원인은 민주화와 탈유교주의 동향의 성숙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의 증대에 힘입어 참여지향적 패턴을 증강하기 시작하였다.

－ 제 3 절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

디지털 매개가 주어진 아키텍처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디지털 융합은 기술과 사회 간의 보다 심대한 수렴과 확산, 공진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운동 환경을 창출하였다. 시민들이 쉽게 조직화・동원하고, 또 독자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시민운동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즉, 디지털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시민행동 환경을 창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융합 시대 사회운동은 기존과 사회운동과 대별되는 변화상을 노출하였다.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과정에서의 정부만이 아니라 정치매개집단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위상은 현저히 약화되면서도 시민운동이 발전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시민단체의 시민동원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약화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이미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시민성에 근거한 자생적이며 수평적인 형태의 새로운 저항적 사회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제 4 장 디지털 매개와 융합 사회운동의 비교

－ 제 1 절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

첫째,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은 과거 과다한 거래비용과 동원할 수 있는 운동자원의 부족으로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조직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의 잠재력을 현실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온라인공간에서의 버텀업(bottom up) 방식의 정보 확산과 공유는 기성 권력의 검열이나 기성 언론의 게이트키핑에 맞서 시민 주도의 의제설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은 인터넷의 힘을 빌려 글로벌 사회정의나 반전 같은

거대담론을 복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구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킨 전기가 되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이슈는 국내 차원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환경보호, 소수민족 자치, 여성 참정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라크전쟁 반대운동 역시 디지털을 매개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디지털 매개운동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 못한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프라인 운동의 온라인 의제화, 또는 디지털 기술의 사회운동 활용이하는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BBS나 언론사, 진보단체, 각국 정부 웹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파티스타나 이라크 반전 시위와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을 조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에서 단순한 활용과 이용이라는 일차원적인 측면의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제2절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

첫째, 리더십 없는 운동이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드러나듯이 복수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집회를 경쟁적으로 조직하고 주도하거나, 뚜렷한 운동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의 시위 참여자들을 동원하는 양상이 그것이다. 이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의 전형으로 디지털 융합 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것이다.

둘째, 전통적 비정치집단의 운동 주도이다. 온라인상에서의 광범한 정보교환과 토론은 이들을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된 운동주체로 전환시켰다. 이는 과거와 달리 특정 계급・계층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운동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 같은 정치적 소외집단도 사회운동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운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큰 함의를 응축하고 있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촉발하고 있다. 일찍이 토플러는 정보기술을 통하여 반(半)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모델을 창안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적절한 긴장과 자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 제5장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미래 전망

첫째, 디지털 융합이 심화될수록 시민의 참여 채널은 다각화되고 더욱 다양한 유형의 사회운동이 등장할 것이다. 컨버전스 시대 사회운동 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중심의 탈조직적 참여이다. 이는 디지털 융합기술이 가장 크게 투영된 1인 미디어 또는 모바일 기기가 강력한 동원 기제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사회운동은 장차 상시적인 소규모 사회운동 또는 1인 사회운동으로 변모될 가능성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다.

둘째,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운동이다. 주요한 이슈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아메바와 같은 형태로 자기증식하며 여론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논쟁과 토론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행동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서 우리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재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즉 시민들이 시민 이익을 중개하는 기존 조직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창출해가는 자기결사형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사회운동은 지구적 범위에서 제4의 민주화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엔진으로 등장할 것이다. 헌팅턴이 제시한 민주화의 물결은 지역, 문명, 이념에 토대해서 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시아와 동유럽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물결은 거대한 흐름을 멈춘지 20년이 되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민저항은 그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국가들은 공히 저발전된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사회로서, 추후 디지털 융합이 체제 변동의 촉매제로 역할할 것임을 선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제6장 결 론

디지털 융합이라는 기술적 사회적 조건에서 운동이슈의 성격에 따라 사회운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잠재력 폭발력을 상시적으로 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공히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에 이르는 이슈 범위와 국내 수준에서 초국적 수준에 이르는 공간 차원에 걸쳐 있다. 최근 아시아의 반권위주의 시민저항 사례들은 디지털 융합이 제4의 민주화 물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예시하고 있다. 카라칠과 보아스는 디지털기술이 그 어떤 요인들보다도 강력한 민주화 도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기성 민주주의 국가들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재활성화 또는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의 실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리고 운동의 기반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매개로 나아가 디지털 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운동자원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과 국가 또는 시민과 초국적 레짐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21세기의 단상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과거처럼 특정 계급 계층 이익을 중심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시민 일반의 포괄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시민의 성격이 탈계급적으로 변모하였다기보다는 이익과 이해의 조화 속에 어우러지는 다중(multitude) 또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시민 변화에 주목하고 정책적 소통을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의 구축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시민은 어느 시대보다 더욱 지적이며 능동적인 정치 주체이다. 한편 생활세계의 파편화, 정책의 불만족, 일상정치로부터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과잉된 참여를 촉발시킨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시민의 등장을 상시적 감

시자 또는 잠재적 저항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미래 발전의 동반자로 그리고 정책개선의 피드백(feedback)으로 적극 동원해야 한다. 즉 통치 패러다임을 거버넌스라는 적극적 협력 통치로 전환해야 한다.

▶ 둘째, 시민사회단체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과다한 시민 이해와 요구의 투입은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통치의 비용과 실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시민단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을 국정 파트너로 삼았을 때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지고 정책추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 셋째, 정부신뢰 구축

한국사회에서 공적 신뢰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연히 대중과의 소통은 단절되기 마련이다. 단적으로 지난 촛불시위는 불신과 불통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기 전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제도정치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엄청난 갈등비용을 치르고 통치불능의 경험을 겪은 만큼 사회운동의 과잉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넷째, 사회운동에 대한 유연하고도 합리적 대응의 정치규범 확립

향후 디지털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운동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운동주체가 될 수 있으며 운동의제는 더욱 다변화될 것이다. 사회운동 집단의 체제 내적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수용함으로써, 이들을 저항세력화하기보다는 제도정치에 견제와 긴장을 불어넣은 대안집단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규범이 정립될 때, 사회운동 집단의 참여문화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 다섯째, 디지털 융합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 제공

현대의 시민들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참여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① e－청원제도, ② 정책수렴 폴 제도, ③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e－토론방, ④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같은 아이디어 풀(idea pool), ⑤ 정책결정집단과 네티즌과의 정기 정책 토론회 등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제도적 참여의 장에 시민들을 흡인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비제도적 참여의 장에 정부와 제도정치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가령 온라인 공론장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그 장의 플랫폼과 규칙에 순응하여 정책결정집단이 논의에 참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정치적 책임성 배양

오늘날 시민의 위상은 대단히 높아져서 정치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정치적 책임자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아젠다는 단순히 시민 일각의 이해라기보다는 정부・제도정치의 정책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회운동 참여 그 자체보다는 참여라는 수단을 통해 대안을 범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사회적 공익을 산출하려는 목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의 잠재적 위협을 책임성으로 극복할 때 참여와 민주주의와 디지털 융합기술이 공진화하고 정부・제도정치는 시민을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디지털 융합(convergence)은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사회의 대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1차 전환이 디지털 기술의 '매개'에 기반한 사회변화라면, 2차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사회변화이다. 즉 1차 전환의 초점은 디지털이 아날로그 중심의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었던 반면, 2차 전환의 초점은 기술과 사회 제 부문이 디지털 중심으로 통합・재조직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CTs는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를 넘어, 광폭으로 사회의 심층까지 공고히 뿌리내려 생활세계와 정치・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기제로 역할하고 있다(서키, 2008).

디지털 융합 현상은 크게 세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유선과 무선의 통합(기기의 측면), 둘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산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측면),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융(행위공간의 측면)이다. 유선과 무선의 결합은 휴대폰의 보급, 유선의 광대역성과 무선의 이동성을 겸비한 와이브로(WiBro), DMB, IP-TV 등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산업 규모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적 잠재력 또한 전례 없이 증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은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행위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즉 디지털 융합은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와 같이 시・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공간적 내파(implosion)라고 할 수 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점, 선, 면에 이어 시간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4차원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을 보완한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동시성의 공간을 가능케 한다(McLuhan,

1964).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융합의 개념은 개념상 다의적이고 맥락상 중층적이다.

기저적 의미에서의 디지털 융합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미디어 환경과 소통양식의 변화로 정보・콘텐츠가 다른 영역을 넘나들어 부문 간 경계가 약화됨으로써, 기존의 이질적 요소들이 모이고(수렴), 섞이고(혼합), 바뀌고(변형), 나뉘고(분화), 거듭나거나(재구성) 새로운 것으로 창발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를 정치영역의 개념으로 협애하게 보면 “기술, 서비스, 산업 등이 디지털을 매개로 수렴되거나 분화됨으로 인해 정치행위자의 제도적 개입・조정과 시민・소비자의 참여를 둘러싼 기존의 조직과 행동양식이 통합되거나 재구조화되는 현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정치영역에서 디지털 융합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미디어나 기기를 통해서도’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곧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우영, 2006: 49～52). 요컨대 디지털 융합은 시민들의 일상적 정치참여 욕구를 고무하고 다채로운 참여 메커니즘의 구현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확장된 시민성(citizenship) 변화 및 엘리트 중심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민참여의 양상은 관습적 방식보다는 비관습적 방식을 더욱 크게 고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융합이 네트워크상의 미디어의 성격을 더욱 사사화(privatization)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나 1인 미디어는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 현상을 낳고 있는데, 이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그리고 공적 채널보다는 사적 채널의 증대된 권능을 의미한다.

디지털 융합으로 인한 비관습적(unconventional) 정치참여 중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잠재력 때문이다. 우선 디지털 융합은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 정치이슈의 파급력과 속도, 집단행동 조직화 비용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시민성의 변화는 정치참여 주체를 다변화하고 이들의 효능감(efficacy)을 증진시키고 있다. 즉 집단행동의 중추 세력이 특정 계급・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일반 또는 시민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탈근대적 성격의 무리들로 확대되며, 이들

의 자발적 참여는 곧 과거의 시민들이 향유하지 못한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에서 기인된 것이다.

디지털 융합 기반의 집단행동은 단순히 일국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와 콘텐츠가 비동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초국적 수준의 집단행동은 흔치 않게 목도된다. 이는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국민국가(the nation-state system)를 중심으로 구축된 시민의식이 세계시민으로 확장되고 있는 하나의 징후이다. 즉 디지털 융합은 인간의 인식 범위를 협소한 지역이나 영토국가, 내지는 민족국가 개념에서 이른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지구사회(global society)라는 무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합은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양식의 전폭적인 재구성을 촉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고, 수평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소통과 연대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들에 의해 온라인 공간에서 재현되는 현실은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정치의 장(field)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장에서의 소통과 다양한 하위참여문화(sub-culture of participation)는 계급 또는 계층적 정체감을 넘어 다중(multitude) 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존재로 시민의 의미를 재창조한다. 이질적 정체성의 동화 또는 느슨한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다중에 의해 사회운동의 양식 또한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래로부터의 신속한 역의제설정과 여론확산, 리더십 없는 운동, 탈계층・탈정파적 이슈공중(issue public)의 등장, 스워밍(swarming)이나 스네이크 마치(snake march) 같은 무정형의 투쟁 전술, 시민 BJ(Broadcast Jockey)에 의한 시위현장 생중계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대중운동,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사회운동,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보조기제로 활용되는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 등의 과거 양식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운동이 재창조되어 기성 정치집단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강력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 연구목표

정보화 및 이후 컨버전스의 급격한 진전은 정치영역에서 대의제 중심의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기저를 뒤흔들고 있다. 급속히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토대로 대의제 정치 관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일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개조직(mediatory organization) 없이 시민 스스로 결사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며 대안적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추구해가는 양상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임의 권한과 민주적 대표성의 문제가 새로운 민주주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시민참여 민주주의 모델의 도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보화 및 컨버전스로 인한 이러한 대안적 민주주의의 논의와 실행은 무엇보다도 시민성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시민은 정치적 자각과 행동이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다. 네트워크와 온라인 미디어는 시민들을 광범하게 연결・소통시킴으로써 이들 스스로 정치적 가치와 이해를 축구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더욱이 유비쿼터스(ubiquitous) IT, 웹 2.0, 미디어 융합 등 비약적으로 혁신된 정보화 환경은 시민들의 정치행동 전략과 효능감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 환경에서는 비관습적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운동의 재활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94년 멕시코 사파티스타 저항운동을 시발로 세계 곳곳에서 등장한 온라인 사회운동은 점차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사회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물리적 기반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망라한 컨버전스 미디어와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기제들로 인해 시민들의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 능력은 현격히 증대되고, 사회운동 전략과 레퍼토리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운동의 규모와 범위도 지역을 넘어 글로벌 단위로 크게 확장되었다.

컨버전스 시대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그것과 현격하게 대별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익집단이나 NGO 같은 공공 부문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반면,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사하고 운동을 주도하는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둘째,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사회운동 이슈의 확산과 참여자들의 조직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사회운동의 전략・전술・레퍼토리가 다변화되고 시위의 규모도 온－오프라인의 융합으로 거대화되고 있다. 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 구조와 시민 간의 만남에서 기인한다. 네트워크는 단절되어 있는 개인들을 연결시키고 이들 간에 무한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당이나 이익집단에 비해 정치적 역량에서 열세에 놓여왔던 개인들끼리의 결속과 동원의 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논의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다음의 세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기술 발전의 단계를 기준으로 시대별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한다. 단계는 산업화－디지털 매개－디지털 융합으로 구분한다. 둘째,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m approach)에 토대해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동학을 분석한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형성과 자원동원 메커니즘이 논의의 초점이다. 셋째,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디지털 융합 환경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상을 조망하고 운동의 동력을 정치과정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온라인 사회운동 사례들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접근하고 실증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King, Keohane & Verba, 1994; Jones, 1999)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분석 개념을 준거로 사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비교의 방법은 사회현상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추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논의의 일반화를 도출한다. 이 연구의 분석 사례는 크게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과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으로 분류된다. 전자로는 그 효시라 할 수 있는 1994년 사파티스타 저

항운동과 2003년 반(反) 이라크전 초국적 연대 투쟁을 다루며, 후자로는 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를 다룬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조 사례로서 버마 민주화운동과 이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에피소드를 보완적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사회운동의 단계별 양태를 통시적으로 비교한다. 근대 이후의 사회운동은 시기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운동양식과 정보화 시대의 운동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간 운동양식의 차이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수준 및 운동담론과 이슈 그리고 운동자원에 의해 구분된다. 산업화 시대의 사회운동은 저(低)발전된 시민사회를 토대로 하며, 주로 거대담론에 기반한 정치 중심의 이슈에 의해 발생하고, 그 성패는 전통적 대중조직이나 전선운동단체의 대중동원 역량에 의해 좌우되었다. 반면 정보화 시대의 사회운동은 자율성이 강화된 시민사회를 토대로 하며, 거대담론과 생활담론을 포괄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 발생하고, 그 성패를 좌우하는데 있어 집단은 물론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운동은 ICTs가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 다시 디지털 매개형과 디지털 융합형으로 분류된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 ICTs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커진다. 요컨대 이러한 현상은 네트워크 개인주의로 지칭할 수 있다. 네트워크 개인주의는 증대된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이들을 조밀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융합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의해 사회운동의 전개 방식이 다각화되고 그 역동성 또한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다이내미즘을 정치하게 고찰한다.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은 최근래 형태로서 분석 가능한 충분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는 못하다. 다만 단일 사례임에도 2008년의 한국 촛불시위는 디지털 융합 효과를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분석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촛불시위는 과거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과의 연속과 단절을 동시에 표출하였다. 이 시위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은 디지털의 정치적 효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고, 단절성은 디지털 효과가 매개가 아닌 융합에 의해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디지털 융합 효과는 사회

운동의 성격, 주체, 레퍼토리의 총체적 변환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사회운동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전망적 사고를 고무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미래상과 정책적 함의를 논구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일종의 제도로서 역할한다. 제도는 인간행동의 촉진 또는 억제를 유인하는 핵심 요인인바, 기술은 장차 생활세계와 정치경제적 행동의 장에 더욱 깊이 침투함으로써 사회변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융합의 진화는 사회운동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변화된 사회운동은 현실 권력과 대의 중심의 민주주의의 향방에 어떤 충격을 가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동시에 미래 사회운동의 여파 또는 성과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요구한다. 특히 미래 사회운동이 시민사회의 저변 곳곳에서 보다 일상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이를 통해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의 예비적 성찰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시민: 계몽적 시민에서 저항 시민으로

오늘날 시민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의 현대적 의미는 사회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시민이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적 자의식과 공동체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로 훈련되었기 때문이다(신진욱, 2008: 13～16). 즉 시민이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기까지는 무수한 정치변동이 있었고, 그 결과 소수 특권층에 대항하는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 시민이라는 용어는 도시나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한정적 자들에 불과했지만, 역사적 격변에 따라 점차 평등한 인격적・정치적・경제적 권리를 갖는 보편적 무리들로 그 개념적 실체적 범위가 확장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시민은 공화정에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며, 정치문화 형성과 민주주의의 실험의 주도자로서의 위상을 점하게 된다.

토크빌(Tocqueville, 2004)이 강조하듯이, 시민은 적극적이고 자발적 역동성을 가진 존재로서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로크(Locke)는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재산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계약을 하는 자유인으로 시민을 규정했다. 그리고 루소(Rousseau)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 역시 전제군주의 타락을 경계하기 위한 권력적인 장치로서의 3권 분립과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Montesquieu, 2007). 이후 시민의 정치적인 권리가 보장된 이후 19세기부터 학자들은 주로 시민 결사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Tocqueville, 2004).

시민에 관한 근현대의 연구들은 공히 초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자유권만을 가진

시민의 삶과 국가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진욱(2008)은 이를 시민성의 시대적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으로 구분한다. 부연하면 초기 자유민으로서의 고대적 시민에서 결사체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시민, 그리고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통해 의회라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공화정을 형성하는 참여하는 시민으로 그 역할과 특성이 변화해온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시민은 자유로운 시민에서 연대하는 시민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연대하는 시민이 반드시 시민성의 발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토크빌이 경고한 다수에 의한 폭정, 전체주의의 가능성이다. 정치권력이 다수를 장악함으로 소수자를 위협하고 지배할 경우, 오히려 시민 기본권은 유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로 인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의 난립으로 사회가 혼란해진 바이마르 공화국(Die Republik von Weimar)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학자들은 시민의 직접참여가 반드시 선(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도 당시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서 중우정치(Ochlocracy)라고 통찰한 바 있다. 중우정치는 올바른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 또는 몇몇 집단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초반 시민에 대한 인식은 주로 엘리트와 대중이라는 구도를 띠고 논의가 발전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에 대한 인식은 1940년대 이후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류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자로 규정된다. 슘페터(J. Schumpeter, 1943)는 시민들이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게 되면 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인 선거참여만을 보장하고 대표로 하여금 위임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시민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으로만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슘페터의 견해는 달(R. Dahl, 1956)이나 엑스타인(Eckstein, 1966) 등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계승된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학자들은 시민참여는 선거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중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시켰다. 즉 이들의 논의의 핵심은 교육받지 못한 우매한 시민의 참여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단순 가수에 의한 폭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받지 않고 우매한' 시민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 이후 시민의 역할에 주목한 참여 민주주의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한다. 본질적으로 시민참여의 의미는 슘페터의 이야기처럼 제한적이지 않다. 제한적인 시민참여는 공직자를 선출하여 위임하는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민주주의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자이면서 참여민주주의론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루소(2002)는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주권이 다른 누구에 의해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거일만 자유로운 영국 대의제의 한계를 비판했다. 물론 루소의 시민참여에 대한 관념은 규모가 작고 자작농으로 구성된 사회를 상정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논의는 참여를 의사결정, 정부의 견제, 그리고 참여과정을 통한 교육기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에 많은 주목을 받는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도 사람들은 참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여 생활 속에서의 참여로 발전할 경우 보다 능동적인 참여자로 진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계몽주의시대부터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20세기 초까지 시민참여를 대표자 선출 등의 제한적인 방식으로 규정했다(Morris, 1999; 임혁백, 2000).

현대적인 시민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은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5) 등이 주장한 다원주의 시각의 시민사회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각은 근대성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의 발전을 상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정치과정의 매개집단이자 정치구조와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평가한다. 이들은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 자발적 조직에의 참여와 지방 수준의 정치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는 참여적 시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후 페이트먼(Pateman)과 맥퍼슨(Macpherson) 등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페이트먼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참여를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밖의 모든 영역을 망라할 만큼 확장해야 함을 역설했다(Pateman, 1970: 167～175). 또 바버(Barber 1998; 2000)도 전통적인 대중사회 시민과는 다른 토론하고 논쟁하며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시민으로서 공적 시민(public citizen)에 주목한다. 그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를 주장하며 시민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참여 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시민에 대한 인식은 전환되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상과 객체적인 존재에서 주도적이고 공적시민으로서의 시민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세계화・정보화로 표상되는 20세기 이후 사회적 변화가 상징되지만 내재된 사회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면적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전후 세대의 등장, 대졸이상의 고학력층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민으로서의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전환되는 촉매들이 발생하였다(Dalton, 2009: 4～7).

그렇지만 20세기 후반에 시민에 관한 논의에서 또 다른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 1990년대 이후 시민참여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시민운동의 다양화에 주목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투표나 시위참여를 벗어나 의사표현과 반대행위를 하는 것, 나아가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시민적인 의사표시의 하나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잉글하트(Inglehart, 1997: 231～236)는 고학력의 젊은 탈 권위세대의 등장에 주목한다. 그는 대중사회 시민이 저학력의 노동자 계급이었던 반면, 1990년대 새로운 X세대가 경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탈물질・탈권위주의적 가치관을 가지는 현상에 주목한다.[1] 시민들은 표현과 자기실현을 중시하고 이들 중 많은 이들

1) X세대는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청년 문화를 지칭하는 사회학 용어이다. 전후세대의 자유로운 사고를 이야기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은 점차 기성 권위에 도전한다. 대중산업사회와 달리 정당과 노조 등의 쇠퇴로 인해 정치 매개집단은 시민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다. 때문에 그는 시민들의 관습적 참여행태는 줄어들고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운동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잉글하트는 후기 물질주의 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하락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추세 변화는 인구교체가 가장 큰 영향이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변화도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실증적 데이터 역시 선진 산업국가에서 교육수준과 대중적 정치기술이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지체된다. 그러나 이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해 요구의 목소리를 높인다. 시민은 더 이상 훈련된 선거운동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기성 엘리트층에 도전한다. 따라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 시민의 변화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오렌(Orren, 1997)도 시민의 변화상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첫째, 엘리트가 지도하는 형태의 투표나 정당가입은 줄어드는 반면, 둘째, 개인적으로 기성권위에 도전하는 참여가 증가하고 이런 시민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윤선영・이강형, 2008: 27에서 재인용). 그는 이러한 저항적 참여, 비관습적인 참여는 시민의 권능 강화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취약한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노리스(P. Norris, 2002)는 시민의 행태와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시민의 행위를 정부인사 선임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참여로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즉 노리스는 21세기에 들어 국민국가(nation-state)의 쇠퇴 및 시민사회의 재강화 등 변모하는 권력관계 양상과 동태를 주목하고 그 단서를 “저항적 시민”의 등장에서 찾는다. 노리스는 이러한 저항적 시민의 근원을 인권과 반핵을 제기하며 광범한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했던 1960년대 반전시위에서 찾고 있는데, 68운동 이후 잠재된 저항이 세계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2000년

대 반세계화 피플 파워(people power)로 표출되었다고 설명한다.

네그리와 하트(Negri and Hardt, 2008)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 행동주의(protest activism)가 만개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은 네트워크의 출현과 그에 기반한 탈경계적 정치참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탈권위・탈집중・탈근대 시민이란 의미로서 "다중(Multitude)"의 개념을 도입하고, 소통과 행동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중은 통일성이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차이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민중이나 인민의 개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자와도 다른 의미성을 가진다. 네그리와 하트는 근본적으로 전 지구적인 체제의 정치적・경제적 측면들에 대항하는 엄청난 투쟁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되고,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다중이 지닌 다수성과 차이성을 무기로 삼는 민주주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다중은 모든 차이들을 인정하고 각각의 차이점들에 기반하여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다양한 이슈의 시민운동의 동력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구적 규모의 네트워크는 저항의 사회 네트워크로 진화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의의 맥락에서 참여민주주의론 시각의 시민개념과는 차별적인 저항하는 시민으로 진화되고 있다. 시민은 이제 단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직, 동원하여 집단행동을 전개한다. 참여에서 저항과 항의의 시민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민성 변화는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 및 그에 조응하는 시민의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심화된 정부불신과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탈권위와 탈집중에 대한 시민의 자각이 싹트고 있으며, 현대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제도화된 자율적 시민사회는 새로운 의식으로 무장한 시민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라는 권위체에 복종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능을 지키고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저항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을 바로 저항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적 시민의 등장은 노리스(2002)가 강조한 "평화적 저항의 정치 일상화 또는 정상화(normalized) 과정"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표 2－1〉 시민의 유형

	계몽적 시민	참여하는 시민	저항적 시민
사회운동주체	• 산업사회/베이비붐 세대	• X 세대	• 다중, 탈물질가치 세대
시대 구분	• 근대적 대중사회	• 정보사회	• 디지털 융합사회
민주주의가치	• 대의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 저항적 참여 민주주의
삶의 수준	• 생계 유지	• 물질적 풍요	• 웰빙 중시
교육	• 저학력	• 대졸 이상의 고학력	• 디지털화된 고학력
직업	• 블루 칼라	• 화이트 칼라	• 지식 노동자
성의 역할	• 근대적 차별	• 성적 경계 붕괴	• 여성 역할 확대
사회 다원성	• 인종, 물질적 불평등	• 소수자 보호	• 소수자 권리 신장

출처: Dalton(2009: 4); 신진욱(2008); Negri and Hardt(2008); Norris(2002)을 취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요컨대, 시민에 대한 초기 인식은 자유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투표참여와 법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에 기반하는 계몽적인 시민(duty-based citizen)이었다. 그렇지만 물질적 풍요와 고등 교육기회의 확대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 시민참여의 확대에 따라 시민은 참여하는 시민(engaged citizen) 그리고 저항하는 시민(protesting citizen)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먼저, 자유민이자 계몽적인 시민은 20세기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이후 1960년대까지의 세대가 중심이고, 이들은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저학력의 블루칼라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근대적인 성차별과 사회 다원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즉, 의무에 기반한 시민권 영위에 머무른다. 따라서 시민은 선거에 참여하고 대표를 뽑아 위임하는 방식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권리에 한정된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은 이와 다르다. 세대적으로도 물질적인 풍요의 시기에 태어난 X세대를 기반으로 하며, 정보사회의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기반이며, 직업도 화이트칼라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성적 경계가 붕괴되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된다. 무엇보다 참여하는 시민은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는 시민으로 진화하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적・교육적 영

향이 크다(Inglehart, 1997; Diamond, 1999).

나아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항하는 시민은 탈권위적 포스트모던 환경에서 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마인드가 정립되어 있고 고학력을 바탕으로 지식 노동자로 발전한다. 이에 따른 지식의 확대는 기존 민주주의적인 절차성보다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중시하고 다원화된 가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대의제에 대한 강한 불신 속에서 정부 불신과 탈권위를 지향한다. 과거의 시민과는 달리 이들이 구비하고 있는 디지털 또는 컨버전스 환경은 이들의 능동적 행위와 참여 범위의 확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저항하는 시민의 개념이 단지 반대를 하는 시민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담론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의 저항 주체라는 것이다. 즉 정보 습득이 원활하고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항하는 시민은 과거의 시민들과 다른 정보 통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고학력의 정보지식 노동자들로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쌓은 존재이다. 실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여성, 환경, 평화, 가족, 비폭력, 성적 소수자, 협동조합, 생태 등의 이슈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이슈이다. 전통적인 이슈가 단지 정치권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내지는 사회적 합의와 논쟁에 대한 것이었다면 저항하는 시민의 이슈는 다원화되었고 그 해법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저항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저항'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저항하는 시민은 반대 위주의 시민이라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되고 다른 개인・집단과 상시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있고, 이성적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사회운동

1. 정체성 형성과 자원동원

사회운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들은 집단적 정체성 또는 신념의 공유를 강조하거나, 개인 차원의 기회비용과 기대이익 사이의 합리적 타산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이 이론들은 중범위적 수준에서 사회운동이 발생하고 정치동원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해왔다. 우선 사회구조론의 경우, 집단 간에 구조화된 이해 대립과 그에 따른 사회운동 발생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이 시각에서 사회운동의 발생 원인은 사회구조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론은 낮은 기회비용과 높은 산출 이익을 사회운동의 발생 원인으로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 시각은 개인적 이해를 초월하는 비합리적인 동기와 정보 획득의 비대칭성 그리고 집단적 연대와 유인 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취약성을 보여왔다(장우영, 2006).

근래에 정체성 지향 패러다임(collective-oriented paradigm)과 자원동원 패러다임(resource mobilization paradigm)은 사회운동 연구의 가장 경쟁적인 패러다임이다(Cohen, 1985). 멜루치(Melucci, 198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양 패러다임이 초점을 맞추는 맥락은 다르다. 전자는 주로 참여자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여 사회운동이 왜(why) 발생하는가를 묻는다. 반면 후자는 주로 자원동원 능력을 중시하여 사회운동이 어떻게(how) 발생하는가를 묻는다. 즉 양 패러다임은 사회운동이 발생・전개되는 주 요인으로 각각 운동의 '주체'(정체성)와 '조건'(자원)을 강조한다.

전자에 있어서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목표의식을 지닌 개인들이 개인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Gamson, 1992). 즉 사회운동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및 자신과 사회 문제와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을 때 발생하며, 개인 정체성을 집단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속된다(Touraine, 1981; Melucci, 1989).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은 사회 구조 또는 가치 분배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통의 선호를 가지는 행위자들의 견해와 신념의 셋트이다(Wilkinson, 1971).

구체적으로 집합적 정체성은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전개시킨다. 첫째, 사회운동에 관련된 행위자들을 범주화한다. 특정의 사회적 가치나 현안에 대하여 개인은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리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정체성의 장(identity field)을 형성하며 아방(we)과 타방(other)을 구분하는 집단의식을 촉진한다(Gamson, 1992; Scott, 1994). 이는 사회운동의 국면에서 지지자, 반대자, 중립적 관중으로 행위자들의 집합적 역할을 분리시킨다. 둘째, 사회운동의 목표와 방식을 정립한다.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집합적 정체성은 인지적 유대에서 정서적 유대로 나아가 정치적 유대로 발전된다. 이러한 유대감의 발전과 더불어 이들은 상호 관계 속에 자신을 정립시키고 사회운동의 목표와 방식을 합의해나간다. 셋째,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사회운동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정의하고 고무하는 과정이다. 집합적 정체성은 참여자들간 신뢰의 연결망을 공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축적된 신뢰는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들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후자에 있어서 사회운동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효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는 불만의 크기보다는 자원동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느 사회에나 크고 작은 불만이 산재해 있지만 취약한 자원동원 능력은 사회운동의 촉발을 제약한다. 따라서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자원의 규모를 판단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운동자원은 참여자들의 연대와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집합적 유인들(collective incentive)을 뜻한다. 예컨대, 운동조직, 이념, 전문지식, 리더십, 자금, 커뮤니케이션 수단, 외부 집단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자원동원은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전개시킨다. 첫째, 사회운동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증진시킨다. 합리적 개인에게 성공에 대한 믿음은 참여 비용보다 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편익(benefit)이 더욱 크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다. 참여자가 사회운동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는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이다. 즉 사회운동에 투입되는 조직, 지식, 전략, 재원의 정도가 성공

에 대한 믿음을 좌우한다. 둘째, 잠재적 참여자들을 운동세력으로 현실화시킨다. 운동자원은 참여자들을 결속시키는 매개체이다. 즉 자원동원 없이 익명의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결속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유무형의 자원이 동원됨으로써 잠재적 참여자들은 실질적 사회운동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사회운동의 전략과 효과를 증대시킨다. 사회운동의 전개는 유효한 전략의 실행에 의거한다. 운동자원이 다양하고 그 규모가 클수록 전략적 유연성이 증대된다. 사회운동의 하부구조로서 시위의 규모와 기간도 증대되고 있다.

근래의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양 패러다임 간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운동이 주체와 조건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경우 분석의 적실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자원동원은 사회운동의 각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e approach)은 양 패러다임의 이론적 성과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주체와 조건이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Buechler, 1997). 집합적 정체성과 운동자원이 만드는 집합행동의 심리적 물리적 틀(frame)이 사회운동의 실행 수준을 규정한다(Snow, 1986). 초기의 집합행동의 틀은 사회운동의 전개에 따라 확장・축소・변환되는 재정렬(realignment)을 거치기도 한다. 사회운동의 틀 형성과 재정렬은 두 단계의 동원에 의해 구체화된다. 첫 단계인 합의의 동원(mobilization of consensus)은 사회운동의 이슈를 수용하고 동조자들을 충원해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참여자들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이 촉진된다. 두 번째 단계인 행동의 동원(action mobilization)은 참여자들이 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참여자들의 자원동원이 촉진된다(Klandermans, 1989).

2. 구성주의적 접근

최근 구성주의적 접근은 특히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을 규명하는 의미있는 연구성과들을 제출해 왔다.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은 네트워크에 기반하거나

(based) 그것의 지원을 받아(supported) 전개되며, 그 범위는 지역과 국가에서 초국적 차원에 이르는 범위를 포괄한다. 특히 이란, 미얀마, 태국, 티벳 등 비민주적 정치체제들에서의 거대한 시민저항은 네트워크가 민주화 물결의 엔진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네트워크의 다면적인 정치적 잠재력에서 기인한다.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은 사회운동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특성에 주목하자면, 네트워크는 첫째, 탈중심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는 전지구적이다. 인터넷의 범위는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은 기존의 통신수단에 비해 정보가 풍부하고 그 활용비용이 경제적이다. 네트워크는 사회운동의 대중동원과 조직화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기존의 사적 공적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 기업과 권력, 엘리트집단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공개적으로 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공적 사적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성을 감소시킨다(Reeher & Carpini, 2002: 148; 윤민재, 2008: 240～241).

사회운동에서 네트워크는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공간이자 전략적 운동자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양면효과(double impact)로 인해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는 변화를 겪고 있다(Van Laser · Van Aelst, 2009). 정체성 지향 패러다임에서 볼 때, 네트워크는 합의의 동원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개인들이 공동의 의미틀과 정체성을 구축하며 능동적 행위자로 전환됨으로써 사회운동이 발생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합의의 동원은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 및 동질화(assimilation)의 두 단계로 요약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들(networked individuals)은 과거의 공중과는 전혀 달리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타인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쟁점에 관련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은 이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조건이다. 또한 이들은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이 타인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연대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ites)를 보유하고 있다(황용석, 2007). 나아가 게이트키퍼의 부재와 익명의 의사소통은 기성 언론에 대항하는 대안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자율적으로 의

제설정과 여론형성을 추구하는 이슈 공중(issue public)으로 전환된다(Bimber, 1998).

이슈공중은 단일한 이슈에 의해서 형성되어 네트워크상에 매우 넓게 포진한 개인들이다. 이들 중에는 이슈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목표의식이 확고한 액티비스트들이 존재한다. 액티비스트들은 적극적인 조직화를 도모하여 자신과 동질적 견해나 선호를 가진 참여자들을 사회운동 세력으로 흡인한다. 조직화는 이슈공중의 집단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공고하게 만든다. 네트워크는 조직 결성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풍부한 단일쟁점조직(single issue organization)들이 신속하게 결성될 수 있다. 이 조직들은 기성 사회운동단체와는 달리 멤버들의 참여와 탈퇴가 용이한 느슨한 연대(loosed tie)에 의거한다. 또한 위계적 명령과 의무적 참여가 아니라 수평적인 의견교환과 자발적 참여라는 특성을 띤다(김용학, 2009: 152～153). 단일쟁점조직들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사이버액티비즘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사회운동 네트워크는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가 아니라 소수의 노드가 많은 링크를 소유하고 있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free-scale network)로 구축된다.

자원동원 패러다임에서 볼 때, 네트워크는 행동의 동원을 촉진하는 도구이다. 즉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운동은 확산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행동의 동원은 사이버액티비즘 및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운동의 두 단계로 요약된다. 사이버액티비즘은 네트워크상에서의 문제제기와 저항에 관련된 일체의 집단행동을 뜻한다. 사이버액티비즘은 청원이나 모금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 방식을 비롯해서, 넷 스트라이킹, 온라인 농성(electronic sit-in), 게시판 도배, 이메일 폭탄, 플레이밍(flaming), 해킹 등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방식을 포괄한다. 이같은 사이버액티비즘 전략의 창의성과 다양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사이버액티비즘이라는 실질적인 저항 행동을 경험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배양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정치적 소수 또는 비정치집단의 사회운동 참여를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 등 반대세력의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전략들을 취하게 된다. 특히 소수자 효

능감을 증대하는 것은 주목된다.

사이버액티비즘이 네트워크 기반의 행동이라면,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운동은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행동이다. 네트워크상에서의 느슨한 유대는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접촉과 집단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인디미디어(Indymedia)와 디지털 기기들이 동원되어 운동의 효과를 증폭시켰던 1999년 시애틀 반 세계화 시위가 그 첫 사례이다. 근래에는 권위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저항에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지원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고무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운동에서는 두 가지 공통적 변화가 관찰된다. 첫째, 운동의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회운동은 전문 사회운동단체들의 기획과 지휘에 시민들이 종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즉 소수의 지도부가 운동의 목표와 시위 전술을 결정하고 시민들은 이를 추종하였다. 반면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운동은 네트워크상에서 채택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하고 시위를 주도해가는 양상을 띤다(Vegh, 2003). 따라서 전문 사회운동단체들의 리더십은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무정형의 시위대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그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 거리시위에서 스네이크 마치(snake march)나 스워밍(swarming)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와 거리시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노트북과 휴대폰, 무선 인터넷은 시위 현장을 온라인공간에 긴밀하게 연결시켜 집단행동의 임계점을 변화시키고 있다(라인골드, 2003). 가령 인터넷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과 인디미디어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시위현장을 생중계한다. 이러한 시민 브로드캐스팅(civil broadcasting)은 시위 실황의 전달, 시위 전술의 공유, 국가폭력의 감시, 온라인공간에서의 지지 여론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둔다. 온라인 방청자들은 이에 반응하여 응원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동영상을 전파함으로써 시위의 파급력을 증대시킨다. 시민 브로드캐스팅은 권력과 자본에 유착한 언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성 언론이 운동의제나 시위확산에 비판적일 경우 사회운동은 종종 이들을 대상으로 전선을 확대한다. 더

욱이 네트워크가 기성 언론에 맞서는 강력한 의제설정 공간으로 함으로써 대안언론 운동은 어느 때보다도 크게 신장되고 있다.

제3절 디지털 융합과 탈근대 시민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화

디지털 융합에 기반한 온라인 사회운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이다. 즉 온라인 사회운동은 시민성의 변화와 디지털 융합의 진전에 따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운동 양식으로부터의 단절과 연속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운동 양식의 중첩과 전환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해왔는데, 그 흐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온라인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환경 조성과 함께 등장한 온라인 사회운동을 과거 대중운동 양식과 비교 고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즉, 디지털기술이 도입됨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운동을 재활성화 또는 다각화시키는 패턴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Davis, 1999: 172～175; Barber, 2000).

한편 최근 가속화된 디지털 융합과 저항하는 시민의 등장은 온라인 사회운동의 양식을 재혁신하는 두 번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심화된 기술 환경과 그리고 네트워크화 된 시민 간의 관계 속에서 온라인 사회운동이 재조직 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주된 연구주제는 단지 온라인에서의 시민운동이 오프라인의 보완적 기제인지,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인 기제인지에 대한 논란에 머물렀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앞으로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연구방향은 현실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디지털의 복잡성을 체계화하고 온라인 사회운동의 틀 속에서 재해석하여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조화순・송경재, 2004; 김용철・윤성이, 2005; 윤성이, 2006; 장우영, 2006).

이러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 연구의 효시는 라인골드(Rheingold, 2002)이다. 그는 유무선 융합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융에 의해 구축되는 연계망을 네트워크로 정

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망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와 지식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로 무장하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집단을 “참여군중(smart mobs)”으로 규정했다. 이와 유사의 데이비스(Davis et al., 2002)의 미국 사례연구도 공통의 정체성과 신념에 기초한 집단들이 사이버공간에서 광범하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저항 행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Margolis, Resnick and Levy 2003).

국내의 연구도 활발하다. 디지털 도입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운동의 양식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초기 연구(백욱인, 2001)에서 시민참여 기제로서 e－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용철・윤성이, 2005; 윤성이, 2006), 그리고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운동 논의(김의영, 2004)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 연구동향은 참여의 효능감 분석, 그리고 대학생, NGO, 정치집단 등의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운동의 인과구조 분석이 시도되었다(유석진, 2004; 정연정, 2004; 윤성이・장우영, 2007; 김경미, 2006; 강원택, 2007). 그리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연계성의 시공간 융합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웹 2.0에서 등장한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에서의 정치참여를 분석하는 시도도 발견된다(최민재, 2007).

최근의 디지털 융합 환경의 발전은 기존의 디지털 매개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파급력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운동 집단의 입장에서 디지털 융합의 가장 큰 이점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상시적이고 다면적인 정보교환과 여론창출 나아가 자발적 동원이 대단히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2004년의 태국 군부쿠데타에 맞선 시민저항, 2007년과 2008년의 버마 민주화운동, 2007～9년 티벳과 신장위구르의 대 중국 독립운동, 2009년 이란의 시민저항, 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는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과 저항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디지털 융합, 그 중에서도 특히 1인 미디어의 폭발적 잠재력을 과시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사회운동들은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됨으로써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광범한 호소와 동의를 획득하였다(송경재, 2009b: 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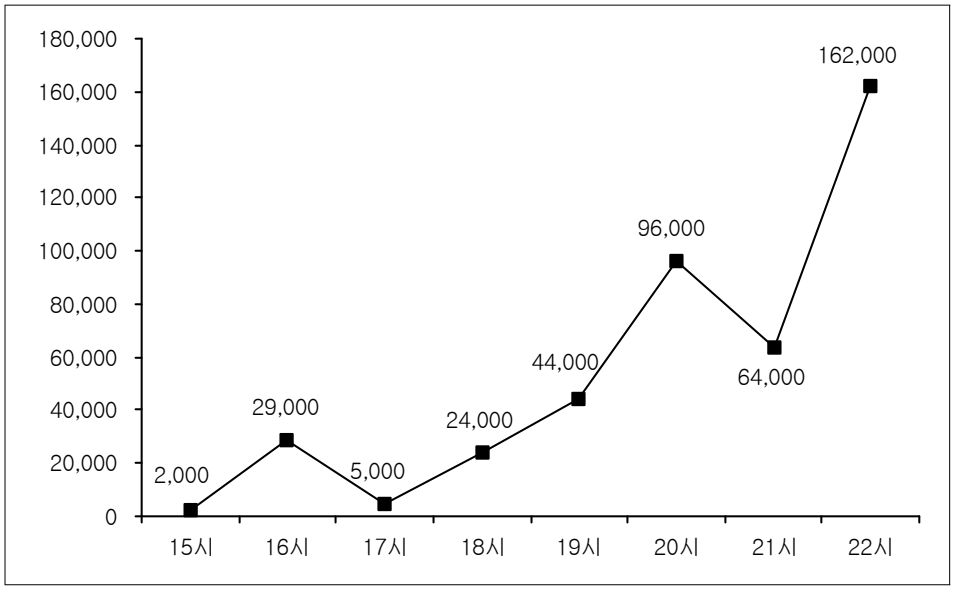
예컨대, 2009년 이란 대통령 부정선거 반대시위 과정은 이러한 디지털 융합으로부터 초래된 이란 시민사회의 재조직화와 범 세계적 지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이란 바시지 민병대의 총격을 받은 '네다'라는 이름의 한 16살 소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http://www.youtube.com)와 트위터(http://www.twitter.com)에 공개되자 순식간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됐다. 이후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란 당국의 폭력적인 시위진압에 항의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직접행동으로까지 발전했다(뉴시스, 2009년 6월 22일).

이 과정은 전형적인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의 사회운동의 전개를 잘 보여준다. 물론 시작은 이란 대선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부터였다. 하지만 이슬람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저항은 쉽게 차단되었고 집회를 조직하기 어려웠다. 당시 이란 젊은이들은 휴대폰과 이메일,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한다. 정부의 언론 검열에도 불구하고 시위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테헤란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매일 저녁 광장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시위 장면은 다시 무선 인터넷을 타고 생중계되었고 강제진압과 '네다'의 죽음 장면은 그대로 이란과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알려졌다. 통신과 인터넷, 방송이 융합되어 자칫 묻혀 버릴 뻔한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만약 디지털 융합을 사회운동에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란에서의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집단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이란 민주화 운동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두 가지 특징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속도가 아닌 실시간 사회운동(realtime social movement)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디지털 융합은 단지 인터넷이 아닌 유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사회운동을 가능케 한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놀라운 정보의 확산을 가능케 한다. 실시간으로 시위장면을 전송하고,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는 것은 과거 사회운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위의 정당성을 전파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시위를 재조직할

수 있는 무기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림 2－1〕 6월 10일 청와대 웹 사이트 방문자 수 추이



자료: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보다 극적인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사례는 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이다. 이 시위는 규모 면에 있어서도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시민참여로 나타났다. 특히 6월 10일 시위 참여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1987년의 동일과 비슷하였던 반면, 동원과 참여 양상은 과거와 사뭇 달라 시대의 변화를 절감케 했다. 한 에피소드로 당시 100만 촛불대행진을 주최하던 사회자가 오후 8시 30분 네티즌들에게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접속하여 항의 사이버 시위를 요구하는 장면이 인터넷 동영상 채널들로 생중계되자 불과 1분 후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랭키닷컴의 시간별 트래픽 데이터에서도 입증된다. 오후 8시를 전후해 순간 방문자 수가 9만 명을 넘고, 22시에는 16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시위자가 당시 60만 명(주최 측 추산)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온라인에서도 약 16만 명이 사이버 상에서 참여했던 것으로서, 시민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송경재, 2009b).

디지털 융합은 국지적 차원을 넘어 초국적 수준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재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여겨진다.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시위는 이미 그 전범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가 가세한 비민주주의 체제들에서의 최근의 반정부시위는 인터넷상의 국제적 호응과 지지와 함께 함으로써 민주화의 제4의 물결로 나아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동영상, 생중계, 문자전송, 펌질, 패러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국내적 차원의 국외 확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초국적 사회운동을 광범하게 전개시킬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ICTs가 사회운동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순기능적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즉 정보화 역기능으로 간주되는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중우정치, 정책결정과정의 왜곡, 전통적 대의기구 약화, 디지털 파시즘(fascism) 또는 포퓰리즘(digital populism) 등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송경재, 2009a: 77; Dahlberg, 2007). 그럼에도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참여의 통로가 확대되고, 무엇보다 시민이 다양한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자유민으로서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으로 그리고 탈권위와 탈집중의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저항적 시민으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근래의 사회운동은 다소 과도적이지만 과거의 양상과 단절적인 면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기존의 폐쇄적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매개방식에서 참여, 개방, 공유의 웹 2,0 명제가 확산되면서 개인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민참여 채널들이 급격히 증가・다각화되고 있다. 마이스페이스(http://www.myspace.com)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이트, 트위터(http://www.twitter.com) 같은 단문형 블로그, 영상을 활용한 UCC가 그것으로 이들은 공히 1인 미디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다채로운 유무선 기기들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능을 강화하는 기제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기성의 권위가 약화되는 대신 전문가와 아마추어와의 경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치참여 방식과 문화를 일변시키고 있다(서키, 2008). 이 같은 양상은 연구자들에게 사회운동의 미시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사회운동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제 3 장 한국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 유형과 특징

제 1 절 산업화시대의 대중 사회운동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는 1896년 창립되어 〈만민공동회〉를 주도한 〈독립협회〉를 기원한다.[2] 보다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시민단체 출범은 1903년에 YMCA의 전신인 〈황성기독교청년회〉가 발족되었다. 이후 종교단체와 해외의 선교기관이 유입되면서 신식교육이 확산되고 사회의 근대화가 본격화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제 강점기로 인해 싹이 밟히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서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회〉는 한국 재야운동의 뿌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건국 60년간 한국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내재화되었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권위, 독재, 관료주의적 유산이 지속적으로 후대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운동은 서구와는 다른 정치적인 배경과 민족주의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를 경험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극화되어 반정부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고착된다(송경재, 2007).

민주화의 결정적 기로에 섰던 1980년 서울의 봄이 좌절된 이후 광주민주화 운동은 강한 국가에 맞서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즉 저발전된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강한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운동 역시 탈시민적 이념지향적 운동으로 변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동 3권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시민권의 확보는 주요한 사회운동의 단골이슈가 되었고 그 최종 목표는 권위주의 정부의 해체와 민주정부의 수립에

---

2)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 운동단체로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1898년 만민공동회를 주관했다.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방식은 운동지도부의 선도투쟁과 이들에 의한 대중 조직화라는 전통적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된다. 사회운동은 '조직'에 근거한 대중동원의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자유민으로서의 시민성에 기초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91년 5월의 반독재 사회운동은 권위주의 하에서의 투쟁주체였던 민중과 노동자계급과 대비되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가능케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정치적 참여를 주도한 시민운동 세력이다.

민간정부가 등장한 1990년대에는 시민의 요구가 다원화되어 환경, 복지, 여성, 평화, 인권, 등 사회 전 영역에 이슈들이 망라되어 제기되기 시작했다(정태석 2000, 13). 이러한 탈계급적 시민운동의 등장은 국가권력의 견제, 자본주의의 순화, 사회적 약자 지원, 국제원조, 대안사회 모색, 지구문제의 공동대응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다채로운 시민 이해와 요구가 폭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는 사회운동은 권위주의 정부의 퇴진, 대통령 직선제 실현, 문민정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단계적 민주화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탄압국면은 약화되고, 아울러 운동세력의 제도권 내 포섭 및 정치적 결사의 합법화가 진전되었다(장우영, 2006: 53～54). 절차적 민주화는 비록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형 통치 시스템이 기저에서부터 약화시켜가는 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민주화 중심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 재건설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대안 담론의 형성을 추구해나갔다. 여기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집권 시절에 시민사회 지원론이 확산함으로써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는 자기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가령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의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신고제의 도입은 시민사회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8년의 '정보공개법'과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으로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송경재, 2007: 278～281).

이러한 과정은 80년대 이후 보다 확장된 시민사회의 틀 내에서 시민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운동,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90년대의 시민사회운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자유권을 위한 운동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Dalton, 2009).

제2절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

한국에서 1990년대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변환기적 사건은 ICTs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ICTs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식의 사회운동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위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효시는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반미시위로 볼 수 있다. 물론 간헐적으로 온라인으로부터 출원한 사회운동이 목도되긴 했으나, ICTs를 매개로 대규모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1994년 상용화 된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2004년 말 이용자 수는 3,158만 명을 기록했는데,[3] 이러한 정보화의 급격한 파급을 배경으로 참여지향성이 강화된 시민들과 함께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002년 촛불시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자면 선행된 두 가지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초반의 '노사모'의 정치인 팬클럽 활동과 2002년 월드컵의 붉은악마 신드롬이 그것이다. 이는 디지털기술을 매개한 참여 지향적 시민의 원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3)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536만 명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 데이터는 http://isis.nida.or.kr/ 참조(검색일: 2009년 9월 22일)

먼저 노사모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발적 유권자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은 폭발적 흥미를 끌어낸 정치적 이벤트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모는 의회의 정치적 변방인에 불과했던 노무현의 대선 후보 선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어 노사모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 정보네트워크 구축, 전국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활동을 벌여 자신들의 지상목표를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월드컵 응원 당시의 광범위한 시민의 거리응원은 전통적인 거리문화와는 다른 시민 참여형 응원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은 정치와 문화의 경계를 소멸시키며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문화를 태동시킨 것이다.

이러한 선행적 동향은 2002년 촛불시위로 전이된다. 효순－미선양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앙마'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이것이 3일 만에 확산되어 시청 광장에 3만이 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결집하여 대규모 시위로 전개되었다. 이는 당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당시부터 시작된 디지털 사진 패러디, 정치인 어록시리즈, 항의 메일, 사이트 공격, 리플 달기, 글 나르기(펌질), 사이버 폴(cyber poll) 참여, 사이버 촛불시위, 동영상 등은 일상적인 시민참여 양식으로 정착되어갔다. 이같은 2002년 촛불시위의 여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으로 이어져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이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확장은 시민들의 각기의 참여 수준에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후 정보화의 보다 심층적인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방식이 자생적으로 개발・파급될 여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원인은, 정보화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가 대규모 집단행동을 가능케 했다(송경재, 2009a; 장우영, 2006). 정치과정에서 과거 동원의 대상에 머물렀던 시민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결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참여의 원칙에 보다 합법성을 주고,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시민성으로의 변화는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등장한 교육적으로 훈련된 시민의 등장으로 가능한 것이다.

둘째 원인으로, 절차적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민주적 자각과 훈련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시민권이 일정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시민참여의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동시 진행된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이같은 대선과 같은 정치변동의 국면에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다.

제3절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사회의 대중 사회운동으로부터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으로의 변화는 크게 시민성의 변화와 ICTs의 전 사회적 파급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양자 간의 조응이 시민의 정치참여 행태와 사회운동의 구조를 바꾸어온 것인데 (Kalathil and Boas, 2003),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근래에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폭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그 징후가 목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OECD의 보고서(2006)는 웹 2.0의 참여, 개방, 공유 명제가 IT 업계의 상업적 논리를 사회 전반을 재조직화하고 정치과정에서 시민의 지위를 더욱 크게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고민을 던지는 것은 바로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상이다. 디지털 매개가 “폐쇄적 웹 아키텍처와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디지털 융합은 “개방적 웹 아키텍처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창안”하며, 기술과 사회 간의 보다 심대한 수렴・확산・공진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운동 환경을 창출하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 같은 변화를 최종적으로 담보해야 할 주체는 바로 시민인

데, 최근의 사회운동들에서 디지털 융합에 토대한 시민의 정치적 각성과 결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의 해외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은 반드시 정보화의 물적 토대가 강한 지역에서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보화 수준이 낮거나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 티벳 독립시위, 이란 민주화시위 등은 이러한 사례들에 해당된다. 이 사회의 저발전된 시민사회는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1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조직화와 시민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디지털 융합이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화 물결의 새로운 엔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화가 진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폭발력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 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가 그 대표적인 예증이다. 이미 이 시위의 특징이나 정치적 여파는 학계와 언론지상에서 거듭해서 다루어왔다. 이 시위의 다른 함의는 그 성격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적 시민의 도전 양상을 띠었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지체된 민주주의 공고화 국면에서 발생하였다는 대조적 특징을 띤다. 이는 결국 디지털 융합의 흐름이 민주주의 이행 또는 공고화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향후 관련 국가들의 정치 발전에 심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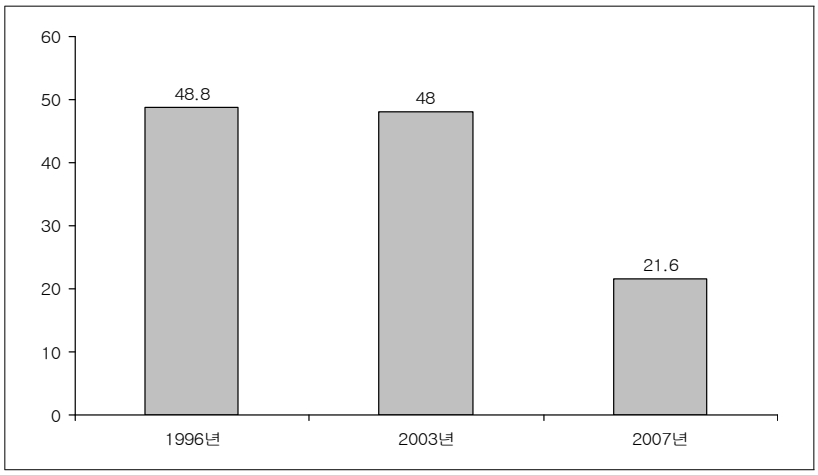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누리는 국가에서 오히려 이러한 불신 구조의 확대는 다양한 연구들로 확인되고 있다(Inglehart, 1997: 230～236). 정부 신뢰도는 세계가치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욱 확대된 시민권과 참여를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사회발전연구소, 2007). 이런 변화의 중심에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보다 확대된 민주화를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쟁점별・이슈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판적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실 자유로운 시민이 저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억압적 권위주의에 대한 생존권적인 저항이고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의 참여를 통해 단련된 자연스러운 시민권의 요구이다. 계몽적 시민에서 참여적 시민, 저항적 시민의 전환은 두 번째 조건과 연계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 지배층 엘리트의 권위는 더욱 하락한다. 결국 계몽시민에서 참여시민, 저항적인 시민으로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회 합리성, 그리고 시민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은 저항하는 시민의 특성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정치과정 전반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정치매개집단 특히 시민단체(NGO)와 전문 운동단체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장점인 동원력과 의제주도성이 현저히 하락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시민참여도도 저하되고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첫 조사 때인 1996년 48.8에서 2003년 48.0이었으나 2007년에는 21.6으로 4년 사이에 5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시민단체 신뢰도 추이



자료: 사회발전연구소(2007)

이러한 하락의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 증가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당과 정부의 신뢰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정치발전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민단체 지도부의 인식과 활동양식이 변화하는 시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1980년대 산업사회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학연, 지연, 운동연, 정파연 등을 바탕으로 한 오프라인 활동 지향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은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연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다양한 차원의 저항을 시도한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저항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탈지역적으로 또는 초국적으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저항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와 유－무선 결합의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로 나타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Kalathil and Boas(2003)는 웹이 중국과 이란, 싱가포르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저항집단의 형성과 시민동원의 확산 행태는 사이버 행동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청원, 시위, 보이콧, 서명운동, 유－무선 게시글, 실시간 시위 미디어 생중계, 성명발표, 촛불 들기, 깃발게양, 인터넷 댓글, 사이버 시위, 항의 글 등 디지털 융합 기제의 등장은 굳이 시민단체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저항적인 정치의 사회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4 장 디지털 매개와 융합 사회운동의 비교: 사례의 미시분석

제 1 절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

이 절에서는 상기의 논의에 바탕해서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사례는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EZLN)과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시위이다. 이 사례들은 초기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운동을 전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파티스타 운동은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효시 격이라 할 정도로 초창기 온라인 사회운동의 동학을 잘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라크 반전 시위 역시 글로벌한 이슈에 대응해 지구 시민사회가 어떻게 정보를 교류하고 연계하여 집단행동을 시도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은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기반을 둔 원주민 무장단체이다. 이들은 초기 무장반란세력으로 치부되어 멕시코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탄압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봉기하게 된 전말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세계의 많은 지식인과 활동가들의 동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단지 일국의 반란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사파티스타가 갓 등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이슈공동체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러한 사파티스타 운동을 포스트모던 혁명이라고 까지 칭할 정도로 이들의 운동 전략과 활동은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사파티스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날인 1994년 1월 1일부터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개의 게릴라군 정부의 전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 원주민들의 공동

체를 국가가 보호해달라는 것이 목표였다. 즉 이들의 근거지였던 치아파스주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자연파괴, 착취구조 문제를 부각시키고 NAFTA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인식에서 이들은 무장투쟁을 시작한다. 사파티스타는 독립이 아닌 자치를 그리고 치아파스 지방의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근본적으로 멕시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불거진 것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에 준하는 형태의 자치와 경제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대한 착취 금지로 구체화되었다.

초기 멕시코 정부의 대응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1월 1일부터 12일 동안 교전이 시작되었으며 사파티스타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으로 종결되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단속을 겪는 협상 끝에 정부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산안드레스(San Andres) 협정(1996)을 맺게 되어 사태 해결의 전기를 맞는다. 이 협정은 원주민들에게 자율과 특별권을 허용해주었다. 하지만 세딜리오 대통령과 제도혁명당(PRI)은 이 협정을 무시하고 그 대신 군사 주둔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1년 폭스 정부가 들어서자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의회에 자신들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멕시코시티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멕시코 정부와는 일면에서는 협상을 일면에서는 저항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이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초기의 군사적인 선제공격이후 멕시코 정부군에 막혀 밀림지역에서 게릴라전으로 전환했다. 당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디지털 매개의 저항이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치아파스 지역의 실태와 탄압에 대해 인터넷을 활용했다. 초기 인터넷 환경은 단지 게시판과 소식지 차원이었지만 전 세계 주요 시민단체와 진보단체에 이들의 소식을 전달했다.

초기에는 별 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멕시코 반란군으로 치부되었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목표와 의미에 대해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밀림지역에서 정부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기존 BBS망이나 게시판, 세계 유수의 언론사 홈 페이지

등에 글을 게시한다. 그리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정부군의 탄압과 소탕작전의 부당함을 네트워크로 알렸다. 이어 전 세계의 언론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서 멕시코 정부에 무차별 진압을 금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멕시코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고립된 지역의 운동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고 나아가 세계화로 인한 원주민의 고통을 알리는 통로로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이어 또 다른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사례로 2003년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반전시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24시간에 걸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방식의 이 시위는 반전과 평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운동을 벌인 사례이다. 2003년 2월 15일 “세계는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790여 곳에서 이라크 전쟁 반전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 시위는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가장 거대한 범세계적 동시다발 시위로서 당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세계인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다.

시위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인터넷을 활용해 전 세계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매개 시민운동을 시작한다. 곧 이어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반전 평화운동 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초기에 이들은 단순히 정보제공과 각 국가별 반전운동에 대한 동향을 취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터넷을 이용했다. 하지만 반전운동 참여 단체들의 내부 토론에서 전 세계적인 동시집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공유되면서 이에 동조하는 각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급증하였다. 한국에서도 약 7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정도로 반전운동은 금세기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위는 초국적 수준에서 표출된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의 전범으로 인식될 만하다. 평화와 반전의 이슈는 글로벌 사회정의운동의 중요한 의제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세계 각국의 집단들을 조직적 이념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연결고리는 바로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은 미국이라는 패권적 헤게모니에 맞선 대항헤게모니의 창출 공간이었으며, 비록 단발성 투쟁이긴 하였지만 글로벌 이슈를 중

심으로 한 세계인들의 연대투쟁의 진원이 인터넷이었던 점은 향후 초국적 사회운동의 진행 양식을 가늠케 한다.

각 지역의 시위 참여 규모는 전례 없는 것이었다. 뉴욕 시위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3년 3월 22일, 이라크 폭격이 시작된 이틀 후에는 30여만 명이 참가한 가두행진이 벌어졌다. 독일의 베를린 시위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50여 만 명이 참가하였다. 런던과 파리, 로마에서도 모두 100여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등장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반전운동은 확산되어 홍콩과 서울, 도쿄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었다. 반전시위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총 인원 1,000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 시위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연대 시위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효과는 지대한 것이었다. 반전이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이렇듯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와 일사불란한 동원이 가능했을 가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다.

사파티스타 운동과 이라크 반전운동은 공통적으로 인터넷을 사회운동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구 시민사회에 확산시킴과 아울러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김은규, 2005). 부연하면 사파티스타는 지역 이슈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효과를, 이라크 반전운동은 전 세계적인 이슈를 지구시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촉발효과를 가져왔다.

앞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파티스타는 최초로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동의 도구로 창조적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인터넷을 처음으로 사용한다. 당시, 사파티스타 게시판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평화애호 세력, 소수민족 보호주의자, 신자유주의 반대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후 사파티스타는 세계와의 소통방식을 주로 인터넷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할 정도로 인터넷을 중요한 운동의 무기로 활용하였다(Kingsnorth, 2003). 그리고 이라크 반전 네트워크 운동 역시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더욱 확산된 인터넷 연결망의 위력을 재확인시켰다. 여기에 인디미디어(Indymedia)와 같은 대안적 언론들이 가세함으로써 인터넷은 명실상부한 정보 확산

체계를 구축하며 지구 시민사회의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사파티스타 운동과 이라크 반전운동에서 나타난 인터넷 매개의 특징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파티스타와 이라크 반전운동은 디지털을 활용하여 정보의 확산과 연계가 가능한 온라인 사회운동의 전범이 되었다. 이는 과거 과다한 거래비용과 동원할 수 있는 운동자원의 부족으로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조직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강력한 저항의 잠재력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온라인공간에서의 버텀업(bottom up) 방식의 정보 확산과 공유는 기성 권력의 검열이나 기성 언론의 게이트키핑에 맞서 시민 주도의 의제설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양 운동은 인터넷의 힘을 빌려 글로벌 사회정의나 반전 같은 거대담론을 복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구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킨 전기가 되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이슈는 국내 차원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환경보호, 소수민족 자치, 여성 참정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라크전쟁 반대운동 역시 디지털을 매개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반전과 평화라는 거대 이슈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제기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역시 인터넷 네트워크가 시민운동에 적용되면서 하나의 도구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디지털 매개운동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것은 주어진 디지털 기술과 환경을 이용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 근본적으로 오프라인 운동의 온라인 의제화, 또는 디지털 기술의 사회운동 활용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BBS나 언론사, 진보단체, 각국 정부 웹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파티스타나 이라크 반전 시위와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을 조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에서 단순한 활용과 이용이라는 1차원적인 측면의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살펴볼 디지털 융합의

사회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고 여기에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이슈의 확산과 전파, 그리고 내적인 동학이 더욱 역동적이라는 차이가 드러난다.

제 2 절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특징과 효과

2000년대 한국에서는 세 차례의 대규모 촛불시위가 발생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규탄과 2004년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그것이다. 이 시위들은 공히 온라인상에서 의제와 여론이 형성되어 대규모 시민저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촉진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띤다. 2002년의 경우 인터넷신문(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의 제안으로 촛불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약 50만 명이 참가하여 결국 미국 부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을 개정하였다. 2004년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카페(국민을 협박하지 말라)의 제안으로 촛불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약 2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강력한 탄핵반대 캠페인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기각을 얻어냈다. 2008년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토론게시판(아고라)에서 집단적으로 형성된 네티즌 여론에 의해 촛불시위가 발발하였으며, 약 3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도화된 정보화 환경이 정부의 대외 협상 결과에 대하여 촛불시위를 폭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확대하며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책투명성을 높여왔다. 인터넷은 종래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시민미디어로서 역할하고 있다. 메시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 붕괴, 게이트키핑의 해체, 쌍방향적인 실시간 소통을 구현한 인터넷은 종래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일거에 붕괴시켰다. 정치

적으로 이는 기성 권력이나 언론의 의제설정(agenda-setting)을 약화시키고 평등한 정치행위 주체로서 시민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즉 인터넷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과 여론형성 메커니즘은 일상정치(everyday politics)를 촉진해왔다. 그리고 권력 변환기에 인터넷은 자발적인 시민 조직화와 동원 기제로 활용되었다. 2000년 사이버 총선연대 활동, 2002년 노사모 선거캠페인, 2004년 온라인상의 탄핵반대운동이 그 예들이다. 특히 금번 촛불시위의 경우 웹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화 환경에 토대해서 확산되었다. 웹2.0은 개인 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바탕해서 네트워크상의 개방, 참여, 공유를 가속화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예컨대, 다음 아고라와 같은 포털 공론장을 통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발현, 블러그를 통한 거대한 의제확산 네트워크의 구축, 소규모 커뮤니티인 카페를 통한 신속하고도 광범한 시민 조직화와 동원, 아프리카와 칼라TV 등 UCC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킹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웹2.0 참여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의제설정과 여론반전을 무력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제형성과 확산－여론형성－조직화－정치동원 메커니즘을 선 순환적으로 촉진하였다.

이렇듯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비할 바 없이 확대된 웹2.0 환경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집행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다. 앞의 정부들도 전자정부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행정편의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해왔다. 즉 인터넷은 시민과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기제로 역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UCC나 웹2.0 환경 같은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제형성과 확산－여론형성－조직화－정치동원 메커니즘을 선 순환적으로 촉진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렇듯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비할 바 없이 확대된 웹2.0 환경에서 정책 거버넌스의 취약한 제도화 수준은 사회운동의 발생과 지속을 자극하는 역설을 드러내었다.

합법적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560만 표라는 역대 대선 사상 최대 표차로 여당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던 터

였다. 이어서 4월 9일 18대 총선에서 집권당은 의석의 절반을 넘은 15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 또한 민주화 이후 집권당이 거둔 최대 승리였다. 더욱이 실질적 동일 정파인 친박연대와 이념적 우군인 선진당의 의석을 합하면 개헌세력에 육박할 정도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새 정부와 국민과의 정치적 허니문은 불과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러한 면에서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반전을 가져온 의제가 갖는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쟁점은 졸속협상과 검역주권 상실 그리고 국민건강 위험의 세 측면으로 요약된다.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지만, 2007년 10월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이후 수입검역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재개되었는데, 4월 11일 개시된 협상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18일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 협상은 투레벨 게임(two-level game)의 성격을 띠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8일 만에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즉 협상의 결과는 2006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 조건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었다. 종래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및 위험 물질 발견 시 전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되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교역국들도 최소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렇지만 새로운 합의안은 월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국이 광우병통제국가의 지위를 박탈당할 때에만(광우병 위험국)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은 검역주권을 상실하였다(노컷뉴스, 0507). 다른 협약국들에 비해 명백히 불평등한 합의안은 광우병의 발병 등 국민보건을 크게 위축시키는 우려를 낳았다.

동시에 쇠고기 이슈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정책실패(policy failure)의 대표 의제였다. 정부 출범 직후 환율정책 실패와, 물가폭등, 실업률 급증 등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 표차로 선출시킨 근거가 되었던 경제성장 공약의 실현이 조기 좌초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반복되는 정부인사 파동과 대운하 사업의 밀실 강행, 영어 몰입식 교육, 한－미 동맹론・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독도문제 등 외교정책에서의 난맥상은 민심의 급속한 이반을 초래하였다. 요컨대

실용주의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초반에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실패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투명성의 부재였다는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촛불시위도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 협상을 통한 국가이익의 추구를 포기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시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세계 최상위의 한국 ICT 수준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시민저항이 전개되었다. 광대역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률과 이용률이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광범한 디지털 기기가 시민의 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4－1〉 한국의 연도별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순위	12위	6위	4위	2위

둘째, 청소년과 여성 등 비정치집단 내부의 일상적 네트워킹이 정치동원을 촉발함으로써 이들이 운동의 주도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생활세계 온라인 커뮤니티는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위참가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카페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일쟁점조직들의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을 중심으로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이 대단히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보름만에 이 문제는 운동의 제로 표출되었다. 이밖에 블로그는 토론방과 함께 촛불 담론을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주축으로 공론장의 내포와 외연을 확대하였다. 시위 현장에서의 시민 브로드캐스팅(civil broadcasting)은 국가폭력을 제어하고 운동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넷째, 리더십 없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대책회의 등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지도

부가 아닌 집회와 시위의 실무기관의 역할에 한정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했으며, 시민들이 운동의 구호와 전략・전술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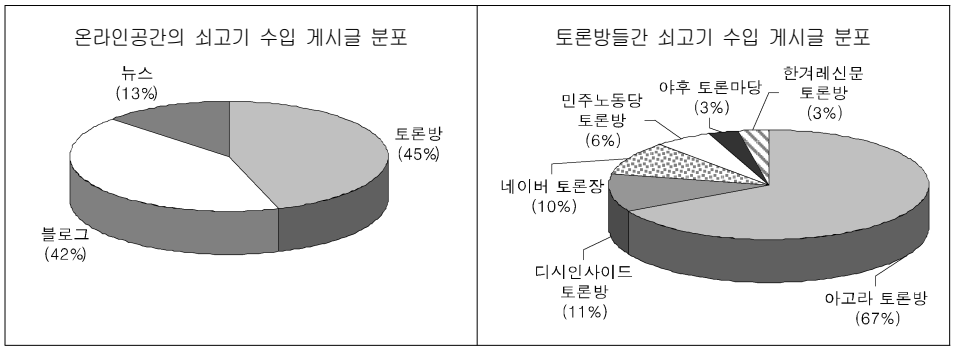
다섯째, 촛불시위는 반 정부와 동시에 반 보수언론의 성격을 띠었다. 쇠고기 수입 반대 의제 자체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수언론과의 의제설정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였다. 시위 과정에서 조중동 반대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광고 캠페인・조중동 광고업체 불매운동과 한겨레신문・경향신문 구독운동 등 촛불시위를 언론 수용자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선스타인(Sunstein, 2001: 54)은 검색장치와 같은 여과 기술(filtering technology)은 본질적으로 시민들의 인터넷의 선택적(selective) 이용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 즉 시민들은 인터넷의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온라인공간에서 자신과 의견이나 선호가 동일한 집단들을 찾아다닌다. 따라서 주요 이슈가 등장했을 때 인터넷은 온라인상에 산개한 사람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질집단으로 결속시키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이들은 토론 등 다양한 공론활동을 통해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을 추동하며 이슈공중으로 전환된다. 이들이 공론활동을 주도하는 각종 웹사이트들은 다양한 층위의 공론장을 형성한다. 이는 기성 미디어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적 공론장(alternative public sphere)으로서, 이질적 견해들의 수렴과 조정보다는 동질적 견해의 재강화를 촉진한다(Dahlgren, 2007; Norris, 2002).

촛불시위에서 대규모의 이슈공중은 이같은 선택적 인터넷 활용과 동질집단의 결속 그리고 대안적 온라인 공론장의 구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코리안클릭(인터넷 트래픽 조사기관)이 컨텐츠 트래픽 분석 프로그램인 버즈워드를 통하여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전후 기간(4월 1일～5월 18일) 동안 인터넷에서 유통된 6만4천개의 쇠고기 수입 게시글의 출처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이슈공중이 생성된 웹사이트 유형은 포털사이트의 토론방과 블로그 그리고 언론사와 정당 사이트의 토론게시판이었다. 이 분석 결과에서 미디어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블로그가 의제설정의 새로운 기제로 등장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반면 언론과 정당 등 제도화된 공공

부문의 웹사이트 비중은 현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 온라인공간의 쇠고기 수입 게시글 분포



촛불시위 기간 동안 저항의 메카로 운위되었던 아고라의 의제설정 파워는 줄곧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촛불시위의 제안과 대통령 탄핵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공간도 아고라였다. 아고라 청원방에서 네티즌 안단테가 제기한 시민저항과 대통령 탄핵은 운동의제로 수용되어 보름만에 촛불시위를 촉발하였고, 한 달여 만에 130여만명의 동조 서명을 이끌어냈다. 정당이나 사회운동단체가 아닌 익명의 제안자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같은 사회적 공분 결집과 사회운동 촉발 메커니즘은 인터넷의 정치적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부를 점차 통치 불능의 형국으로 몰고 갔다. 더욱이 추후 안단테가 고교생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 충격의 여파는 더욱 커졌다. 대개의 온라인 저항이 농성, 연좌시위, 도배, 플레이밍 등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반면, 청원은 문제제기와 연대 서명을 통하여 네티즌의 힘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최근 가장 애용되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 다음 청원방에서의 온라인 서명수를 보면, 2005년 5,835건, 2006년 8,151건, 2007년 7,806건 등 총 22,000여건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집된 서명은 현실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4)]

4) 예컨대 2006년 11월에는 서울 인사동 문화쇼핑몰 '쌈지길'이 유료로 바뀐다는 소식

〈표 4－2〉 아고라 청원방 대통령 탄핵 서명자수 변화

일시	4월 6일	4월 15일	4월 20일	4월 25일	4월 30일	5월 5일	5월 10일	5월 15일
서명자수	1,500명	1만명	2만명	4만명	20만명	52만명	114만명	132만명

자료: 필자 작성

아고라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장이자 시민저항의 진원으로 역할한 것은 참여촉진적인 플랫폼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아고라는 포털 사이트 토론방들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5개의 토론・청원방들 내의 46개의 게시판들을 통하여 제반 이슈들에 대한 공론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 게시판들에서의 평판시스템(reputation system)은 참여자의 효능감을 높이고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형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찬성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베스트 게시글 중 1～2개는 미디어 다음의 메인 화면 뉴스박스로 이동하여 대중에게 읽힌다. 촛불시위 기간 동안 미디어 다음 뉴스박스의 월간 순방문자수가 1,500만명을 상회하고 페이지뷰가 40억건에 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베스트 글의 여론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아고라 현상의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토론방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아고리언’(Agorian)이라는 이슈공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점이다. 이 정체성의 요체는 서로간의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사회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이들은 익명으로 소통하지만 호응에 의해 보상을 얻고, 평판시스템을 통해 공론장의 권위집단을 형성해갔다. 이러한 정체성과 권위의 형성은 아고라가 참여의 문턱이 높지 않으며 참여가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도모하는 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약한 유대(weak tie)의 공동체 특징을 띠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종국에 이들은 촛불집회 현장에 조직적으로 등장하여 아고라 깃발을 앞세워 시

을 접한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 2,700명이 서명을 하자 쇼핑몰측은 유료화 방침을 철회했다. 2006년 12월에는 환경미화원 샤워시설을 만들자는 다음의 청원에 2,900명이 서명하고 언론보도까지 가세하자 행정자치부는 2007년 1월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권고문을 보냈다.

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토론공간의 익명의 존재들이 정체성을 공유하며 사회운동 주체로 등장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슈공중의 조직화와 동원은 생활세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버텀업(bottom-up) 방식과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주도적인 유형은 전자로서 온라인 생활세계 커뮤니티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 커뮤니티들은 패션, 요리, 쇼핑, 성형수술, 스포츠,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일상생활 소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비정치적 집단이었다. 이 커뮤니티들은 공통 관심사에 관한 오랜 동안의 정보교환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높은 신뢰

〈표 4－3〉 촛불시위 주도 온라인 생활세계 커뮤니티(인터넷 트래픽 순)

커뮤니티	URL	성격	참여 형태
Miclub	www.miclub.com	여성 전용 포털사이트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Souldresser	www.cafe.daum.net/souldresser	패션 정보 교환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82cook	www.82cook.com	요리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쌍코	www.cafe.daum.net/19810114/	성형수술 정보 교환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이화이언	www.ewhaian.com	이화여대 동창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	www.club.limeusa.com/mizworld	미주 한인주부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MLB PARK	www.mlbpark.com	미국 메이저리그 뉴스 교환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SLRClub	www.slrclub.com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Dvdprime	www.dvdprime.dreamwiz.com	DVD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Ppomppu	www.ppomppu.co.kr	쇼핑정보 공유 동호회	• 의견광고 개제 • 촛불시위 참여

자료: 필자 작성

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론게시판과 블로그, 인터넷 뉴스 등으로부터 광범하게 유입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들은 이 커뮤니티들에서도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대개의 커뮤니티들이 여성 전용이었기 때문에 쇠고기라는 먹거리 이슈에 대단히 민감하였다. 이들은 게시판을 통한 정보교환과 토론 나아가 시위자금 모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고 게재, 촛불시위 현장에서의 집단 포퍼먼스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촛불시위 대중으로 전환되어 갔다.

조직화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 집단의 조직화이다. 통상적인 인식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대단히 수동적이거나 정체된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는 집단이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현실로 인해 대표적인 탈정치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8년 촛불시위에서의 대규모 청소년 정치참여는 기존 현상과 통념에 대한 큰 반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정치참여를 촉발한 이유들은 여러 맥락에서 고찰될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의 독특한 세대문화 특성,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민감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단적 거부감 등이 그것이다.[5] 이와 함께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극대화시킨 역동적 온라인 환경은 정치참여의 강력한 하부구조로 작동하였다. 즉 뉴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치적 정체성과 효능감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윤성이・장우영, 2008).

이밖에 카페를 중심으로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단일쟁점조직들이 대규모로 삽시간에 형성되었다. 카페는 소규모 커뮤니티의 활동 기반으로, 대개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온라인 카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2008년 7월 2일 현재 미디어 다음에서만 156개의 운동카페들이 결성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체 규모는 이를 몇 배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단일쟁점조직의 신속하고도 대규모 등장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인터넷의 정치적 잠재력에 기인한다.

---

5) 청소년 포털 사이트 로이월드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에 대한 응답이 9,303명 가운데 7,825명인 84%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으로 응답하였다(고뉴스 2009/05/10).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는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게시판 토론 참여 등 외에 주로 비관습적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그것은 온라인 촛불시위, 로고송과 패러디 제작, 배너달기, 온라인 촛불시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론이 비등해지고 촛불시위에 대한 물리적 탄압이 자행되면서 공격적인 핵티비즘(hacktivism)이 등장하였다. 핵티비즘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정부・기관・기업・단체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공격을 감행하여 서버를 무력화하는 파괴적 활동 방식을 뜻한다(Denning, 2001). 네티즌들의 집단적 플레이밍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가 폐쇄되었으며, 이밖에 십여개의 여당 의원들의 홈페이지들이 폐쇄되었다. 그리고 6월 1일과 2일 한나라당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연이어 해킹이 감행되어 온라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2008년 촛불시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며 종래의 한국 사회운동과 전혀 다른 경향적 특징들을 보였다. 첫째, 리더십 없는 운동이다. 최초의 촛불시위는 5월 2일 개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의해 개최되었다. 이들에 의해 촛불시위가 확산되자 5월 7일 1,800여개 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하여 민주화 이후 최대 운동연합체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운동의 지도부로 등장하였다. 전통적으로 집회와 거리시위는 위계적 결사체인 사회운동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지도되어 왔다. 이 점에서 촛불시위는 매우 색다른 것이었다. 복수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집회를 경쟁적으로 조직하고 주도했으며, 뚜렷한 운동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의 시위 참여자들을 동원해냈던 것이다. 대책회의는 애초부터 일사불란하게 기획하고 지휘하는 중앙지도부를 결여하고 있었다. 촛불집회와 시위 현장은 과거의 전투적이며 위계적인 집회문화를 압도하고 있었다(김용철, 2009: 127～129). 그렇지만 대책회의 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은 안티이명박 등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었다. 그리고 대책회의는 시민들에 의해 운동의 지도부라기보다는 가이드로서 그 역할을 제한받았다. 즉 대책회의는 집회의 주최자에 불과했으며, 집회는 시민들의 자율적 발언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시위자금도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 충당되었다. 그리고 거리시위에 있어서도 시민들 스스로 운동의 구호와 전략・전술을 결정

하였다. 지도부의 공백을 즉석 시민토론이 대체하였으며, 휴대폰과 PDA가 시위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시위대의 행로는 시애틀 반WTO 시위나 오타와 G8반대 시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로를 종잡을 수 없는 스네이크 마치(snake march)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 비정치집단의 운동 주도이다. 촛불시위는 노동자와 대학생 등 전통적 운동 주도집단이 아닌 청소년과 여성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들은 촛불시위가 고조기에 이르기까지 시위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광우병 공포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갖는 집단이었다. 이들에게 쇠고기 수입은 운동의제를 넘어 생활의제의 위상을 가졌다. 온라인상에서의 광범한 정보교환과 토론은 이들을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된 운동주체로 전환시켰다. 이들의 대규모 시위 참여는 정부에 대한 중산층의 광범한 지지 철회를 초래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조직화와 시위주도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대안적 논의가 제기되었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은 크게 반전되지 않았다. 5월말 현재 무당파층이 38%에 육박하였다. 임기 말의 국회는 정부와 시민 간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야당은 11년 만에 장외투쟁에 합류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온라인 토론게시판, 촛불시위 현장과 학계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논의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6월 11일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촛불시위와 가두행진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및 UCC 사이트 내부의 개인 방송채널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이 중계는 시위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계속되어 기성 방송사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것은 물론 시위대와 인터넷 접속자들을 연결하고 상호 정보를 소통하게 하였다.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그리고 인터넷방송 라디오21tv는 100회의 모든 촛불시위를 생중계하였다. 오마이뉴스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시청료로 시위를 생중계하였는데, 보름 간 1억4천5백만원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칼라TV도 촛불시위 생중계에 참여하였다. 주목

할 점은 개인 차원의 브로드캐스팅이다. 대표적으로 UCC 사이트 아프리카에서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노트북과 캠코더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채널에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였다. BJ(Broadcasting Jockey)라 불리는 이들은 와이브로 인터넷과 웹캠을 연결하고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착용하여 화면, 음성, 자막으로 입체적으로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였다. 촛불시위가 고조기에 이르렀던 기간(5월 25일～6월 10일)아프리카 생중계 채널은 17,000여개가 개설되어 770여만명이 시청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기간에 아프리카 사이트 방문자수는 57%, 페이지뷰 49% 증가하였다. 시민 브로드캐스팅이 큰 호응을 얻자 21차 촛불시위를 공영방송 KBS와 MBC가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생중계하는 사태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표 4－4〉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의 촛불시위 중계 시청자 추이

	방송된 채널수	시청자수	최대 동시 시청자수
5월 25일	473	24만명	1만명
5월 26일	703	40만명	3만명
5월 28일	654	31만명	3.2만명
5월 29일	1,032	47만명	4만명
5월 31일	1,891	106만명	6만명
6월 1일	2,501	127만명	10만명
6월 7일	1,115	56만명	4.6만명
6월 10일	1,357	70만명	5.4만명
합계	9,726	501만명	37.2만명

자료: 한겨레신문(2008/06/03; 레디앙(2009/06/05)

방송은 자막과 해설이 곁들여져 역동적으로 중계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송 화면 측면의 게시판에 지지 글을 올리면서 의견과 정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시위에 합세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 양식은 촛불시위 효과를 대단히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한 시위대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밤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시위대 폭행 생중계는 네티즌들의

공분을 촉발하였고, 동시에 수만명의 네티즌들이 즉시 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온라인 항의시위를 벌이는 행태가 빈번하게 연출되었다. 그 결과 이 홈페이지들은 번번하게 다운되었으며 연행자들을 조기 석방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는 1999년 시애틀에서의 반세계화 시위를 중계한 인디미디어들의 활동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생중계 규모나 네티즌들간 상호작용 그리고 연이은 정치적 항의는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었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투명성, 정책투명성을 높이는 시민 참여와 감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와 정책의 집행과 산출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공론활동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주체를 확장함으로써 생활담론의 일상적 논의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담론의 심도에 따라 그것을 정치담론 또는 운동의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 시민미디어로서 기존 미디어 경쟁구도에 개입하여 언론지형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의제형성은 미디어 의제를 거쳐 선별되어 공중의제로 전환되는데,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게이트키핑을 통해 의제 선별을 하는 것을 극복하고, 미디어 의제 단계에서부터 인터넷이 시민미디어로서 개입되기 때문이다. 자원동원론의 시각에서 촛불시위의 발생・확산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부단한 발전과 적극적 활용 전략은 사회운동의 전략과 양상을 질적으로 재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 촛불시위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진화된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여기에서 진화는 두 측면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라는 운동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의 진화와 운동 주체와 구성 방식의 진화이다.

제 5 장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미래 전망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융합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융합은 지식이 권력이 되는 정보사회에서 수렴과 확산으로 재구성된 구조를 만든다. 디지털 융합 시대에서 정보의 습득은 장기적으로 계몽적 시민에서 참여시민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가진 저항하는 시민으로 진화하는 자양분이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저렴한 거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자원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은 시민운동의 미래상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이버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킹, 블로그, 미니홈피를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가 등장하고, 수렴되고, 통합・확산되는 과정의 반복에서 디지털 융합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축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민들을 정보 습득력과 디지털화된 식견있게 교육시킬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의 사회운동의 특징을 추출하고 함의를 살펴보자. 앞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행위자와 구조에 대한 디지털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컨버전스 사회로 분류하여 각각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을 대중운동, 디지털 매개 사회운동, 디지털 융합의 사회운동으로 고찰했다.

둘째, 이러한 각각의 사회운동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하나는 시민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천착했다. 의무적인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으로의 변화라는 구체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구조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어떻게 공진화 하는가를 규명했다.

셋째, 계몽시민에서 참여시민, 저항시민으로 진화하는 시민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체계화하면 세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세대의 변화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큰 변화는 1980년대를 전후해 나타난다. 이 시기의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는 과거 전쟁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세대와 히피문화, 록 음악 등 자유주의 세대가 사회적 다수를 차지한다.[6] 유럽의 세대 특징도 주목해야 한다. 68세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전통적인 선거참여는 하지 않지만 1980년대 이후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소규모 결사체 운동이 활성화되었다.[7] 한국 역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1960년대 이후 태어난 민주화 세대의 등장은 전통적인 계몽시민과는 다른 세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다음 세대에도 주목해야 한다. 저항시민은 바로 이러한 이전세대의 경험과 교육을 가족으로 느끼고 새로운 시각과 자유로운 학문에 접근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표 4－4〉에도 정리했지만 계몽적 시민은 저학력의 블루칼라였다면, 참여적 시민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등장하는 저항적 시민은 디지털화된 고학력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의 정치적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실제 교육수준과 경제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재확인하지 않아도 교육수준은 분명 시민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Diamond, 1999). 그리고 민주화 이

6)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약 2억 6천여만명의 미국 인구 중 29%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의 신주도 계층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앨 고어가 연장자이고 빌 게이츠 등이 다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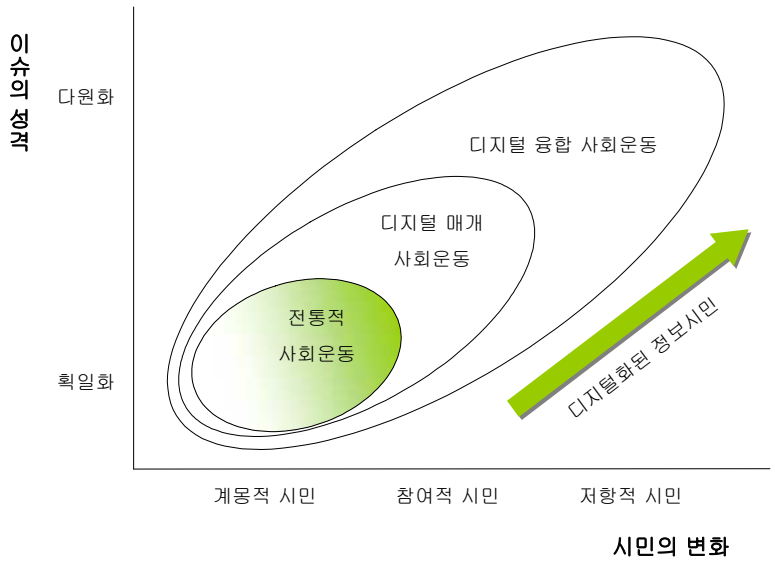
7) 1968년 5월 프랑스 드골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저항운동과 총파업을 뜻한다. 이 사건은 진보적인 좌파성향의 운동이었지만 당시 교육 체계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구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격렬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정치적인 이슈보다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프랑스에서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 해방, 인권 등의 진보적인 개념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의 다원화된 교육은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안겨주었고 참여적 시민, 저항적 시민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적 기반을 제공했다.

셋째, 직업과 경제수준의 변화도 중요한 변인이다. 직업은 경제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 이행국가에서 계몽시민은 산업사회에서 단지 대량생산 시스템의 블루칼라에 머물렀지만 이후 경제적 풍요와 교육의 확대는 화이트칼라의 확대를 가져왔고, 저항시민의 시대에 돌입하면 웰빙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지식 노동자로 발전한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존의 산업사회 그리고 디지털 매개의 사회운동과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연계성 속에서 디지털 융합의 온라인 사회운동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5－1〕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의 동학



〔그림 5－1〕을 도해하면, 온라인 사회운동의 행위자인 시민은 부단히 더욱 적극적이며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몽시민에서 참여시민으로 그리고 저항적 시민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디지털 융합은 저항시민의 단순히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습득과 확산, 훈련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시민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시민의 변화는 사회운동의 형태를 3가지 층위로 세분화시킨다.

첫째, 층위는 계몽적 시민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사회운동이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소수의 사회운동 지도부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오프라인 기반의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운동에 초점을 둔다. 이슈 역시 권위주의적인 상황 내지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권리와 민주정부 수립 등에 초점을 둔다.

둘째, 층위에서는 디지털 매개의 새로운 참여시민이 등장한다. 참여시민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이슈보다 확산된 새로운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가진다. 민주화라는 거대담론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담론으로서 여성, 노동, 빈민, 환경, 통일, 평화 등 다원화된 사회이슈를 다룬다. 참여시민의 가장 유력한 무기는 기존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오프라인 조직화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층위는 저항적 시민과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등장이다. 저항적 시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었음을 우리는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에서 살펴보았다. 저항적 시민은 평화적 저항의 정치 일상화를 추구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인 조직화와 참여를 통한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저항의 형태는 단순한 거리의 투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주권운동, 투표 거부, 항의행위, 입법 청원 등의 저항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의 조직화된 무기는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융합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융 운동방식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 단계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주로 온라인에서 동조세력을 규합한다. 그리고 동조세력이 가시화 될 경우 집단행동을 전개하고 집단행동의 성과를 다시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한다. 여

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선과 무선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자 서비스, 블로그, 토론장 게시판, 사이버 커뮤니티를 오가면서 웹 2.0 방식의 시민운동 양식을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저항하는 시민은 단지 거리의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활동하는 신인류적인 사회운동의 모든 형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온라인 사회운동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융합이 심화될수록 시민의 참여 채널은 다각화되고 더욱 다양한 유형의 사회운동이 등장할 것이다. 컨버전스 시대 사회운동 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중심의 탈조직적 참여이다. 이는 디지털 융합기술이 가장 크게 투영된 1인 미디어 또는 모바일 기기가 강력한 동원 기제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 양식이 사회운동의 지배적인 패턴으로 고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사회운동은 장차 상시적인 소규모 사회운동 또는 1인 사회운동으로 변모될 가능성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집합행동과 합리적 인간 간의 딜레마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된 행동이라는 사회운동의 고전적 정의를 폐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운동이다. 주지하듯이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사이버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있으며 언론운동이나 사회운동, 환경보호 운동, 소비자 주권운동 등에서 커뮤니티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주요한 이슈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아메바와 같은 형태로 자기증식하며 여론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논쟁과 토론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행동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서 우리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재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즉 시민들이 시민 이익을 중개하는 기존 조직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창출해가는 자기결사형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2008년 촛불시위에서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는데, 향후 커뮤니티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이를 통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사회운동은 지구적 범위에서 제4의 민주화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엔진으로 등장할 것이다. 헌팅턴이 제시한 민주화의 물결은 지역, 문명, 이념에 토대해서 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시아와 동유럽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물결은 거대한 흐름을 멈춘지 2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민저항은 그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쿠데타를 좌절시킨 태국과 이슬람 주류의 부정선거에 강력히 도전한 이란의 경우 블로그, 트위터, 모바일이 시민 동원의 진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미얀마, 티벳 등지에서의 시민저항도 디지털 융합기술이 운동자원으로 역할하였다. 이 국가들은 공히 아시아의 저발전된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사회로서, 추후 디지털 융합이 체제 변동의 촉매제로 역할할 것임을 선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미래의 사회운동은 더욱 다양한 이슈와 내용을 가지고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기존의 반응적 시민을 넘어서는 이슈 공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 언론의 게이트키핑을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극복하며 등등한 수준의 의제설정자로 경합하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이슈의 범위는 국지적이거나 국면적이지 않다. 즉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집단지성을 통해 표피에서 에센스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주의적인 의견교환과 토론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구축하는 공론장과 사회운동의 장은 단순히 대항의 의미를 넘어 개인주의에 기초한 집단적 대안 추구의 장으로 전환되어나갈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변화와 디지털 융합을 축으로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 양상과 미래상을 논의하였다. 가장 분명한 점은 디지털 융합이라는 기술적 사회적 조건에서 운동이슈의 성격에 따라 사회운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잠재력 폭발력을 상시적으로 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히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에 이르는 이슈 범위와 국내 수준에서 초국적 수준에 이르는 공간 차원에 걸쳐 있다. 최근 아시아의 반권위주의 시민저항 사례들은 디지털 융합이 제4의 민주화 물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예시하고 있다. 카라칠과 보아스(2003)는 디지털기술이 그 어떤 요인들보다도 강력한 민주화 도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기성 민주주의 국가들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재활성화 또는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의 실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의 무브온(MoveOn.org Staff, 2004)과 같은 진보적 온라인 시민단체는 부시정부의 이라크전쟁에 맞서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리고 운동의 기반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매개로 나아가 디지털 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운동자원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과 국가 또는 시민과 초국적 레짐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21세기의 단상이다.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대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과거처럼 특정 계급 계층 이익을 중심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시민 일반의 포괄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시민의 성격이 탈계급적으로 변모하였다기보다는 이익과 이해의 조화 속에 어우러지는 다중 또는 집단지성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운동의 색채가 서서히 명확해지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정치의 반응에서는 몰이해 또는 단견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가령 청소년과

여성 등 전통적인 탈정치집단이 운동을 주도했던 2008년 촛불시위의 경우 주류 정치의 반응은 배후론의 제기였다. 이같은 적대적 반응은 더욱 거대한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촛불시위를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저항으로 귀결시켰다. 이는 비단 정부나 집권세력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야당에게도 등을 돌림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본원적 문제제기를 드러냈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 사회운동에 대한 아날로그 정치의 대응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처방이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시민 변화에 주목하고 정책적 소통을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청된다.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시민은 어느 시대보다 더욱 지적이며 능동적인 정치 주체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환경에서 시민의 위상은 대상적・객체적 존재에서 주도적・감시적 존재로 바뀌고 있다. 생활세계의 파편화, 정책의 불만족, 일상정치로부터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과잉된 참여를 촉발시킨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시민의 등장을 상시적 감시자 또는 잠재적 저항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미래 발전의 동반자로 그리고 정책개선의 피드백(feedback)으로 적극 동원해야 한다. 즉 통치 패러다임을 거버넌스라는 적극적 협력 통치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측면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헌팅턴과 엑스타인 같은 학자들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사례로 과다 형성된 시민사회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통치의 비용과 실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시민단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을 국정 파트너로 삼았을 때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지고 정책추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셋째, 정부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상대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다. 신뢰는 우호감을 증진시키는 사회자본이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공적 신뢰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연히 대중과의 소통은 단절되기 마련이다. 단적으로 지난 촛불시위는 불신과 불통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기 전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제도정치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엄청난 갈등비용을 치르고 통치불능의 경험을 겪은 만큼 사회운동의 과잉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운동에 대한 유연하고도 합리적 대응의 정치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향후 디지털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운동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운동주체가 될 수 있으며 운동의제는 더욱 다변화될 것이다. 사회운동 집단의 체제 내적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수용함으로써, 이들을 저항세력화하기보다는 제도정치에 견제와 긴장을 불어넣은 대안집단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규범이 정립될 때, 사회운동 집단의 참여문화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와 제도정치는 디지털 융합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Lee 2009, 522～524). 현대의 시민들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참여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 플랫폼들이 사이버공간에 구축・활용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① e－청원제도, ② 정책수렴 폴 제도, ③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e－토론방, ④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같은 아이디어 풀(idea pool), ⑤ 정책결정집단과 네티즌과의 정기 정책 토론회 등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제도적 참여의 장에 시민들을 흡인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비제도적 참여의 장에 정부와 제도정치가 침투해들어가는 것이다. 가령 온라인 공론장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그 장의 플랫폼과 규칙에 순응하여 정책결정집단이 논의에 참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 참여자들 스스로 정치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집단행동은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종종 치유하기 어려운 파국을 초래한다. 오늘날 시민의 위상

은 대단히 높아져서 정치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정치적 책임자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아젠다는 단순히 시민 일각의 이해라기보다는 정부・제도정치의 정책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회운동 참여 그 자체보다는 참여라는 수단을 통해 대안을 범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사회적 공익을 산출하려는 목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디지털 융합기술이 다양한 참여방식을 촉진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참여 효능감에 안주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을 좌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의 잠재적 위협을 책임성으로 극복할 때 참여와 민주주의와 디지털 융합기술이 공진화하고 정부・제도정치는 시민을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택(2008).『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서울: 책세상.

_____(2007).『인터넷과 한국정치』. 서울: 집문당.

김경미(2006). “인터넷이 집합행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김상배 엮음(2008).『인터넷 권력의 해부』.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석준 외(2001).『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용철・윤성이(2005).『전자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김의영(2004).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극동문제연구소편.『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네그리・안토니오 외.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역. 2008.『다중』. 서울: 세종서적.

루소 저・이태일 옮김(2002).『사회계약론』. 서울: 범우사.

류석진(2004). “Exit and Voice in the Information Age,”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 38집 4호. 57～70.

몽테스키외. 하재홍 역(2007).『법의 정신』. 서울: 동서문학사.

배영(2008). “UCC와 네트워크 사회,” UCC문화미디어 & 융합기술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백욱인(2001). “네트와 사회운동,” 홍성욱・백욱인 엮음.『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 서울: 창작과 비평사.

사회발전연구소(2007).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 발표자료집.

서키・클레이(2008).『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서울: 갤리온.

송경재(2009a).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55～83.

송경재(2009b). “웹 2.0 정치 UCC와 전자민주주의: 정당, 선거 그리고 촛불시민운동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담론 201』. 11권 4호. 63～91.

_____(2007). “한국의 정치적 기회구조 변동과 시민주도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2호.

신진욱(2008).『시민』. 서울: 책세상.

유선영・이강형(2008).『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언론』. 서울: 한국언론재단.

윤성이(2006).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사회이론』. 통권 제30호. 187～211.

윤성이・장우영(2007). “한국의 온라인 정치참여 특성: 수요자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정보화정책』. 제14권 제4호. 82～101.

이원태(2007). “동영상 UCC와 대통령선거: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캠페인 사례와 쟁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통권 제22호. 167～235.

이원태・차재권・홍순식(2008).『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준웅・김은미 외(2004).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조건에 따른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17대 총선정국 인터넷토론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제1차 심포지움 자료집.

임혁백(2000).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6권 2호. 서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장우영(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정보화정책』. 제13권 제3호 통권48호. 49～68.

정연정(2004).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한국국제정치학회.『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237～259.

정태석(2000). “시민사회와 NGO,” 김동춘 외.『NG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조화순・송경재(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운동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2006).『웹 2.0은 지식정보 해방공간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뉴시스. 2009년 6월 22일

Adams, Kate.(2008). "Social Collaboration: Joining Forces on the Digital Frontier," http://blog.rebell.tv/files/Whitepaper-Social_Collaboration.pdf(검색일: 2009년 3월 2일).

Almond, G. A. and Verba, S.(1965).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Co.

Barber, Benjamine.(2000/2001). "Which Technology for which Democracy? Which Democracy for Which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Issue 6.

_____(1998). A Place for Us: Hoe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Hill and Wang.

Bell, Danie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enkler, Yochai(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http://www.benkler.org(검색일: 2008년 1월 20일)

Bimber, Bruce(2003). Information and American Democracy: Technolog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ower.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stells, Manuel.(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Chadwick, Andrew.(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hl, Robert. A.(1956).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lton, Russell.(2009).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CQ Press.

Davis, Richard.(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avis, Steve, Larry Elin, and Grant Reeher.(2002). Click on Democracy: The Internet's Power to Change Political Apathy into Civic Action. Boulder: Westview.

Diamond, Larry.(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andy, Oscar. H.(1989).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61～76.

Hague, Barry and Loader, Brian.(1999). Digital Democracy in an Age of Manufactured Image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glehart, R.(1997). "Postmaterialist values and the erosion of institutional authority," in Nye, Zelikow and King.(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17～236.

Jones, Steve.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 Thousand Oak, California: Sage.

Junco, Reynol and Mastrodicasa, Jeanna.(2007). Connecting to the Net. Generation: What Higher Education Professionals Need to Know About Today's Students.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nel Administrators.

Kalathil, Shanthi and Boas, Taylor C.(2003).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King, Gary. Robert Keohane & Sidney Verba.(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ee, Hyeon-Woo.(2009). "Political Implications of Candle 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OBSERBER. Vol. 40. No. 3. 495～526.

MaCaughey, Martha and Ayers, Michael D.(2003).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Margolis, Michael. David Resnick and Jonathan Levy.(2003). “Major parties dominate, minor parties struggle: US elections and the Internet,” Gibson, Rachel & Nixon, Paul.(eds.) 2003.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rnet: Net gain? London: Routledge.

McLuhan, Marshall.(1964). Understanding Media: Extension of Man. MA: MIT Press.

Morris, Christopher.(1999). The Social Contract Theorists. U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MoveOn.org Staff.(2004). MoveOn’s 50 Ways to Love Your Country: How to Find Your Political Voice and Become a Catalyst for Change. Inner Ocean Publishing, Inc.

Norris, Pippa.(2002). Democratic Pheo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2004). Electoral Engineer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ouglass.(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2006). “Participative Web: User-Created Content,” OECD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Report.

Olson, Mancur.(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Orren, Garry.(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Nye, Zelikow and King.(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77～107.

Pinch, Trevor F and Bijker, Wiebe E.(1987). “The Social Construction of Facts and Artifacts: Or How the Sociology of Science the Sociology of Technology Might Benefit Each Other.” in Wiebe E. Bijker, Thomas P. Huges and Trevor F.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ss: MIT Press.

Putnam, Robert.(2000). Bowling Alone. US: Simon & Schuster.

Ragin, Charles.(1987). The Comparative Meth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heingold, Howard.(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하워드 라인골드 지음・이운경 옮김. 2003.『참여군중』서울: 황금가지 펴냄.

Sander, Thomas.(2005). "E-associations? Using Technology to Connect Citizens: The Case of Meetup.com."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chumpeter, Joseph A.(194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Geo. Allen & Unwin.

Tocqueville, Alexis de.(2004). Democracy in America. Library of America.

Toffler, Alvin.(1990). The Third Wave. Bantam Books.

Toffler, Alvin and Toffler, Heidi.(1995). Creating a New Civilization: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Turner Publishing Inc.

van Dijk, Jan.(1999). The Network Society: Social Aspects of New Media. London: Sage.

Castells, M.(2007). "Communication, Power and Counter-power in the Network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 238～266.

Norris, P. A.(2000).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heingold, H.(2002). Smart Mob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Sunstein, C. Republic.com(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Wellman, B., Hampton, K. de Diaz, I. I. & Miyata, K. 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ed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8(3). http://jcmc.indiana.edu/vol8/issue3/wellman.html(검색일: 2008년 3월 6일).

(웹 사이트)

유튜브. http://www.youtube.com

인터넷 통계정보 시스템. http://isis.nida.or.kr

마이스페이스. http://www.myspace.com

천만상상 오아시스. http://oasis.seoul.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트위터. http://www.twitter.com

페이스 북. http://www.facebook.com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Ⅰ) 시리즈 안내

09-01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Ⅰ) 총괄보고서(황주성, KISDI)

09-0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의식과 행동(이종관, 성균관대)

09-03 영상콘텐츠의 일상화에 따른 인지방식의 변화(김성도, 고려대)

09-04 욕망과 매체변화의 상관관계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욕망구조(김상호, 대구대)

09-05 디지털 콘텐츠 표현양식과 다중정체성의 양상: 사례분석과 미래문화의 전망(김연순, 성균관대)

09-06 디지털 컨버전스와 공간인식의 변화(황주성, KISDI)

09-07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변화 연구(류석진, 서강대)

09-08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의제 변화와 정당의 역할(강원택, 숭실대)

09-0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치 거버넌스의 변화(윤성이, 경희대)

09-10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장우영, 대구가톨릭대)

09-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홍원표, 한국외대)

09-1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와 정치참여 연구(이원태, KISDI)

09-13 컨버전스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연구(조남재, 한양대)

09-14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정헌수, 건국대)

09-15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감성적 공감대 기반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김연정, 호서대)

09-16 녹색성장 전략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홍성걸, 국민대)

09-17 디지털 융합과 콘텐츠 관련 산업의 공급사슬 변화 연구(한현수, 한양대)

09-18 디지털 컨버전스와 주요 멀티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손상영, KISDI)

09-19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김문조, 고려대)

09-20 미디어 융합의 전개과정과 사회문화적 파장(유승호, 강원대)

09-21 미디어 발전과 사회 갈등 구조의 변화(이명진, 고려대)

09-22 융합 사회의 인간, 인간관계: 온라인 자아 정체성과 사회화를 중심으로(민경배, 경희사이버대)

09-23 융합미디어를 활용한 공공-민간 상호작용 확대방안 연구(정국환, KISDI)

09-24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디어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이호규, 동국대)

09-25 가상성과 일상성의 컨버전스에 관한 연구(임종수, 세종대)

09-26 미디어 컨버전스와 감각의 확장: 감각확장 미디어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정동훈, 광운대)

09-27 컨버전스 시대와 매체로서의 개인(김관규, 동국대)

09-28 컨버전스 시대의 트랜스미디어 이용자 연구(이호영, KISDI)

09-29 미래예측방법론을 활용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 연구(최항섭, 국민대)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Ⅰ) 시리즈 09-10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2009년 9월 일 인쇄
2009년 9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38(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978-89-8242-635-3 94320
ISBN 978-89-8242-655-1 (세트)